

남한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임무



남한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임무

노동자혁명당



“노동운동은 어떻게 개량주의 세력에게 잠약되었나?
계급협조주의 세력이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 어떤 추억한 승
리요? 한국 자본주의의 ‘국적 상승’ 사이에는 뭔가 연관
이 있는가?”

노동자혁명당 

〈차례〉

남한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임무

들어가며 09

1. 노동운동 내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와 문재인 정부 09
 2. 노동자 대중을 적으로 한 “탈미·자주” 동맹 14
 3. 남한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인정하길 거부하는 노동운동 좌파 18
 4. “중속” 문제? “민족자주” 슬로건의 사회제국주의적 본질 23
 5. 사회배외주의 - 계급협조 기회주의의 완결판 36
 6. 노동귀족층 기반을 공유하고 있는 좌파 40
 7. 좌파의 노선적 후퇴: 사회주의혁명 노선의 폐기인가? 46
 8. 자본과의 투쟁을 노동운동 내 자본 마름과의 투쟁과 뗄 수 없이
결부시켜야 한다 54
- [보론] 남한 제국주의 하에서 “당면 민주주의혁명” 노선? 57

[자료]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남한

I. 몇 가지 일반적 고려 사항

1. 문제의 현실 유의미성 73
2. 정의: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구성요건은 무엇인가? 76

II. 남한 독점자본에 대한 개괄

3. 역사적 배경: 급속한 공업화를 가능케 한 이례적인 조건들 87
4. 고도로 산업화한 현대 자본주의국으로서의 한국 92
5. 한국 독점자본: 국내시장의 지배 96
6. 한국 독점자본: 세계시장에서의 글로벌 플레이어 101
7. 한국 독점자본: 자본수출의 역할 104

III. 남한의 제국주의로의 전화에서 비롯하는 몇 가지 정치적 문제들에 대하여

8. 노동귀족층의 대두와 한국 노동자계급 내 불평등 111
9. 남한 제국주의의 정치적 역할과 그 제한적인 독자성 119

IV. 몇몇 반론에 대하여

10. 남한이 여전히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지라는 스탈린주의적 신화 124
11. 아(亞)제국주의론의 오류 133

V. 반제국주의 강령과 혁명적 전술

12.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 137
13. 오늘 남한에서 반제국주의적 임무 143

보론: 역사적 유추 - 1891년과 1914년 독일에서 맑스주의적 전술 151

남한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임무

노동자혁명당(준), 2020년 9월

〈차례〉

들어가며

1. 노동운동 내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와 문재인 정부
2. 노동자 대중을 적으로 한 “탈미·자주” 동맹
3. 남한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인정하길 거부하는 노동운동 좌파
4. “종속” 문제? “민족자주” 슬로건의 사회제국주의적 본질
5. 사회배외주의 - 계급협조 기회주의의 완결판
6. 노동귀족층 기반을 공유하고 있는 좌파
7. 좌파의 노선적 후퇴: 사회주의혁명 노선의 폐기인가?
8. 자본과의 투쟁을 노동운동 내 자본 마름과의 투쟁과 뗄 수 없이
결부시켜야 한다

[보론] 남한 제국주의 하에서 “당면 민주주의혁명” 노선?

들어가며

노동운동은 어떻게 개량주의 세력에게 장악되었나? 계급협조주의 세력이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 거둔 기괴한 승리와 한국 자본주의의 “국격 상승” 사이에는 뭔가 연관이 있는가? 노동운동 내 민족주의 다수파의 추악한 승리와 노동자들 속에서 문재인 “촛불정부”에 대한 환상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1. 노동운동 내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와 문재인 정부

이 승리가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 보여주는 다음 구절을 보라.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3년.

민주개혁세력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획득하고, 친미수구세력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대구경북, 강남벨트로 왜소화되고 있다.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으로 민족의 통일열망과 북미관계전환에 대한 기대가 하늘에 닿았던 지난 2년간

의 세월이 있었다.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가로 등장하며 역대급 국격상승의 기회도 맞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과 유럽이 어이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 모든 징표들은 지난 33년을 관통했던 87년체제가 끝나고, 2020년체제가 들어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33년 전 6월항쟁의 주역들이 이제는 집권세력이 되었고, 진보운동의 지도층이 되었으며, 사회 곳곳에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 주역들이 지난 촛불에서도 자녀들과 손잡고 광장에 나와 박근혜를 끌어내렸다.”¹⁾

이것이 한국 노동운동 다수파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성격규정이자 ‘시대’ 규정이다. 통칭 자민통/NL로 표현되는 노동운동 내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의 정세인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집권세력이 되었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누가? 우리가! 문재인 촛불정부와 함께! 그리고 계급협조주의 다수파는 촛불항쟁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린 데 이어 총선으로 친미수구세력에게 치명타를 가해 왜소화시켰다고 한다. 물론 ‘우리’ 혼자서가 아니라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과 함께!

1) “[사실] 6월항쟁 33주년, 87년체제를 넘어 2020년체제로”, <<민플러스>> 2020.6.10.

민중당 (진보당으로 개칭)을 비롯한 자민통 중심 세력이 문재인 자본가정부를 내놓고 지지한다는 것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위 사설의 선언은 이들이 지지를 넘어, (정부 입각만 하지 못했을 뿐) 사실상 문재인/민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운영하는 수준으로 이 체제 (“2020년 체제”)에 역사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형식적인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과 계급협조인 민전선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이들 노동운동 내 계급협조주의 다수파는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이 야당이던 시절부터 ‘민주대연합’과 ‘야권연대’의 이름으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팔아넘기고 노동운동·민주노조운동을 민주당 지지 쪽으로 이끌어왔다. 또 촛불항쟁에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성과를 민주당과 문재인이 가로챌 수 있게 한 일등공신 역할을 한 것도 이들 계급협조주의 다수파다. 그런데 우리 “6월항쟁의 주역들이 이제는 집권 세력이 되었”고 “이 사회의 주류가 되”었으니 노동자운동은, 노동자계급은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은 대정부 투쟁이나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는 투쟁은 더 이상 지양하고 노사정 대화로 정부에 협력해야 한다. 노동자계급

은 이미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왜소화되어”버린 친미수구 세력에 대항하는 전선을 지켜주는 것이 제 역할이다. 이 전선의 과제 · 임무에 대해 계급협조주의 다수파는 이렇게 말한다.

“한번 항쟁의 주역은 영원한 항쟁의 주역이다. 오히려 권한이 더 커진 만큼 책임감도 더 높아져야 한다. 2020년체제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

2020년체제는 탈미, 탈세계화로 시작해보자.

코로나 재난과 경제위기는 미국, 유럽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내수와 한반도, 유라시아대륙과 동아시아에 눈을 돌릴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은 이러한 방향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토대구축, 제도전환에 투여되어야 한다.

2020년체제는 자주, 평등, 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야 분단적폐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청산할 수 있고, 촛불항쟁이 요구하는 민주주의도 더 잘 완성할 수 있다....”²⁾

노동운동은 탈미 자주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하는 동맹군으로서 충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계급협조 인민전선 체제를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촛불항쟁과 박근혜 퇴진/ 민주당 집권을 계기로 노동운동 내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와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 간의 은밀

2) 같은 사실

한 동맹이 공공연한 동맹으로 전화되었다.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앞서의 이명박근혜 ‘신식민지 괴뢰 친미 정권’과는 달리 탈미 자주화를 함께 시작하는 정권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탈미 자주화를 지향하는 정권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러한 성격규정은 나아가 “내수와 한반도, 유라시아대륙과 동아시아에 눈을 돌”리는 자주적 자본주의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임무 규정으로 이어진다.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의 이러한 전략적 임무 규정은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가로 등장하며 역대급 국격상승의 기회도 맞고 있다”는 위 인용문의 정세인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제 노동자운동·노동자계급은 문재인 정부와 손잡고 한국판 뉴딜을 통해 미국과 서방에 목을 매는 예측적 재벌 친민 자본주의를 탈피하고 자주적 자본주의를 구축하는 ‘사회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에 대한 지지가 이제 ‘전술적 지지’를 넘어 “2020년체제”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대”에 맞춰 변용된 엔엘 전략노선에서 본질적인 구성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것은 소위 최악 수구세력을 피하기 위해 차악 자유주의 세력을 옹호, 지지한다는 이른바 ‘비판적 지지’와는 완전히 질을 달리하는, 자본가정부의 전략적 동맹군으로 복무하고 있

음을 공공연히 밝힌 것이다. 그래서 전략적 목표 달성 때까지 노동자계급은 문재인 자본가정부의 지지 부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계급협조주의 다수파는 말한다. 이 새로운 시대에서는, 2020년 체제에서는 말이다.

2. 노동자 대중을 적으로 한 “탈미·자주” 동맹

문재인 자본가정부와 손잡는 “탈미·자주” 동맹은 누구를 겨냥한 동맹인가? 기회주의 다수파는 미 제국주의/친미수구 세력을 적으로 한 동맹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대중을 적으로 하여 한줌의 노동운동 ‘상층’과 부르주아지가 맺은 동맹이다. 기회주의 다수파 자민통 세력이 탈미·자주를 지향하는 (즉 미 제국주의에 대한 “신식민지적 종속”에서 탈피하여 자주적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정권으로 신뢰를 두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는 탈미·자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남한 제국주의* 독점 부르주아지의 충실한 집행위원회다. 노동해방과 평화의 최악의 적인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정부로서 문재인 정권은 탈미 대신에 반노동자적인 계급투쟁 무력화와 노동계급운동 분열책동에 주력하고, 계급협조주의 다수파는 전략적 맹우에 대한 탈미 기대를 접지 못한 채 맹우 편에 서서 노

동자를 달래고 무마하는 데 힘쓰는 것으로 독점 부르주아에게 봉사한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탈미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할 때는, 이들 계급협조주의 세력은 ‘비판’하고 ‘지적’하고 ‘규탄’하고 ‘촉구’하고 ‘선언’한다. 그리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이르게 된 데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진보민중단체들”이 성명과 논평과 시국선언을 내면서 “한목소리로 규탄”한다.³⁾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남한 자본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한·미 제국주의 동맹의 강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한다. “고양이 바스키는 잔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먹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같은 “‘요리사’가 오르다가 간하다가 촉구하다가 애원하다가 요구하다가 선언하다가 하는 것에 약속과 웅변과 거창한 성명으로 답하며 얼렁뚱땅 넘기고 있다. 고양이 바스키는 잔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먹는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몸을 부르주아에게 붙들어 맨 이들 “소부르주아지 지도자들은 부르주아지를 신뢰하라고 인민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지를 신뢰하지 말라고 인민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⁴⁾

3)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정부가 책임” 한목소리 규탄”, 《민플러스》 2020.6.21

4) 레닌 〈우리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 레닌전집 66권 (“4월 테제”), 양효식 옮김, 아고라, 96-7쪽

문재인 자본가 정부는 남한 독점 부르주아지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탈미보다 친미를 택할 것이고, 실제로 집권 후 더욱 더 친미로 가고 있다. 제국주의 코리아를 위해서는, 자본투자처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반구 반(半)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초과착취 노획물의 분할을 놓고 다투는 데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탈미보다 여전히 친미가 더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남한 제국주의의 확대·강화를 위해서는 탈미를 통한, 예컨대 새로운 한·중 제국주의 동맹보다 기존의 한·미 제국주의 동맹이 더 유리하다고 - 거대 중국 시장이 남한 자본주의에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 문재인 정부는 보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독자적인 제국주의 열강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갈구하는 한국 부르주아지의 지향과 친미는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친미는 '종속' 자본주의의 표식이 아니라 남한 독점 부르주아지의 글로벌 지위 상승을 위한 1순위 선택지다.

다만 일본 제국주의와는 세계시장에서 이미 최대의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반일”의 기치는 놓칠 수가 없다. “국격 상승”의 최대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남한 독점 부르주아지의 글로벌 지위 상승을 위해서는 남한 제국주의가 일차적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딛고 넘어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일 민족주의적·배외주의적 동원이 반드시 필

요하다. 특히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정치적 독립을 상실하고 이 계급휴전 배외주의에 동원되어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 자본가 정부한테는 이 노동운동 다수와 ‘사회’배외주의 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정부는 노동운동 다수와 사회배외주의 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알고 있다. “반미” 구호 대신 “토착왜구”, “총선 한·일전” 등 반(反)미통당 자유주의 세력들의 배외주의 프레임이 노동운동에까지 널리 침투해 있는 이유다.



▷ 반 미통당 자유주의자들의 4.15총선 웹자보



▷ 민중당 4.15 총선 캠페인 (사진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2020년 4월)

3. 남한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인정하길 거부하는 노동운동 좌파

그런데 이와 같은 공공연한 자본가정부 지지, 그리고 노동자 대중을 적으로 한 민족주의·배외주의 동맹이 어떻게 노동운동 내부로부터의 전면적인 반대에 부닥치지 않고 더욱 더 거침없이 노골화해 갈 수 있게 된 것인가? 노동운동 내 소수파는 이러한 부르주아지와와의 전략적 동맹에 대해, 계급협조 인민전선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는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부르주아지에게 팔아넘기고 노동자들을 계급휴전 배외주의에 동원하는 다수파 사회배외주의 세력에 대해 단호히 전선

을 치고 있는가?

여기에는 통칭 ‘좌파’, ‘좌단위’ 등으로 표현되는 노동운동 소수파의 노선적 약점 문제가 걸려 있고, 또 ‘좌파’를 포함한 한국 노동운동이 노동자계급 대중이 아닌 그 특권적 소수층에 주로 기반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먼저 좌파의 노선적 취약성 문제는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의 “탈미·자주” 슬로건의 기만적 성격, 부르주아적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 따라서 제대로 반대하지 못하고 있는 – 문제다. 현 남한이 미국의 “신식민지”라는, 즉 1990년대를 넘어 2000년대, 2010년대에도 여전히 신식민지 (즉 반식민지)라는 주장은 오늘날 남한 독점자본이 대대적으로 남반구 반식민지 인민들을 초과착취하고 있고, 이 거대한 초과이윤의 일부를 국내에서 떡고물로 흘려 한줌의 특권적 소수 노동자들을 계급협조주의로 유도하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분할지배를 획책하고 있는 추악한 현실⁵⁾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다. 노동운동 다수파는 이러한 “신식민지” 이데올로기를 엄폐물 삼아 자신들의 계급협조주의와 사회애국주의를 정당화하고 남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노동 담당 부관으로 봉사해왔다.

5) 남한 제국주의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국 독점자본의 세계시장 지위, 자본수출 등의 경제적 지표들로는, 이 책자에 ‘자료’로 첨부된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남한〉을 보라.

그런데 좌파 또한 남한 국가의 제국주의적 본질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거나, 남한이 제국주의임을 인정하길 거부한다. 그 때문에 다수파의 “신식민지” 이데올로기와 탈미·자주 노선의 반노동자적 기회주의 본질에 대해 노동자들 속에서 정확히 폭로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노동자들을 자본가 정부 지지와 민족주의·배외주의 동맹 쪽으로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대적 전선을 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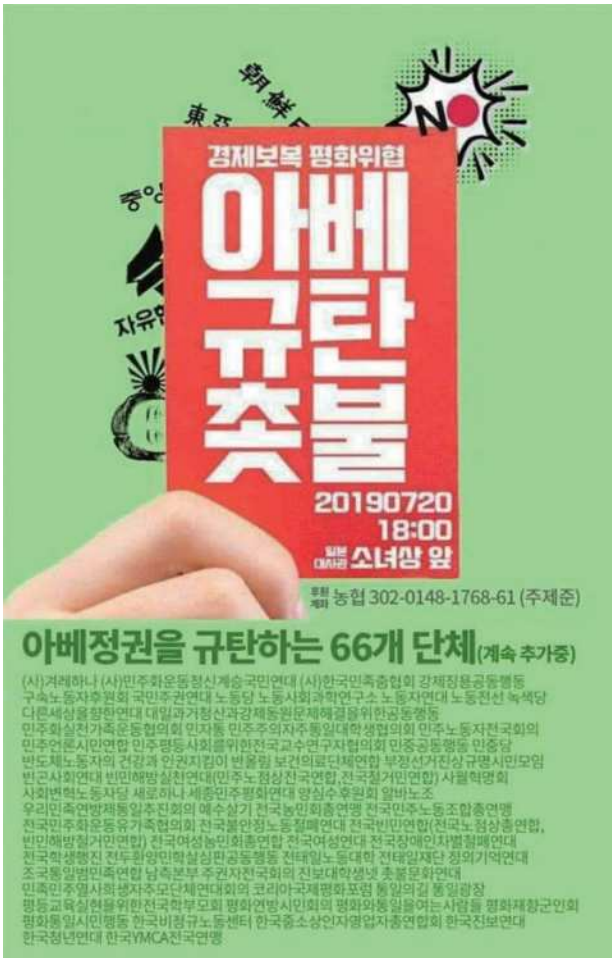
그러기는커녕 민족주의·배외주의 동맹에 대해, 좌파는 오히려 갈수록 그 방향으로 견인되고 있고 사회배외주의에 휩쓸리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 한·일 무역전쟁 당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 속에서 계급휴전과 계급협조를 끌어내고 나아가 정권 지지로까지 유도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 하에 반일 민족주의를 부추겼다. 물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한다는 이름으로! 자본 간 쟁투, 제국주의 독점자본 간 경제전쟁을 경제침략에 대항하는 ‘(경제)주권 수호’ 문제로 포장하여 한국 인민 속에서 애국주의·배외주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호응하여 계급협조주의 다수파도 “경제주권”과 “경제자주독립”, “아베 규탄”을 내걸고 반일 애국주의 캠페인을 전개했다. (“아베 규탄”의 경우 그것이 왜 배외주의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아베 규탄” 슬로건 하에 ‘자’국의 제국주의 무역전쟁에 대해서는 반대

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은 사실상 ‘자’국 정부를 지지하여 국내
계급휴전 배외주의 물이에 앞장 서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일 수
가 없다.)

이에 대해 의당 노동운동은 “한·일 무역전쟁 반대! 제국주
의 무역전쟁을 국내 계급투쟁으로!/ 주적은 국내에 있다!” 기
본 슬로건 하에 문재인 자본가정부의 이러한 정치적 노림수
를 폭로하고, “애국주의적·민족주의적 보이콧 캠페인 반대/
한·일 노동자의 국제주의적 단결·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
적 단결“을 내걸고 싸웠어야 한다. 또 남한 제국주의 부르주아
정부에 호응하여 반일 애국주의 물이에 앞장서며 남한 제국주
의와의 투쟁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을 유리시키려는 노동운동 내
계급휴전 사회배외주의 세력을 가차 없이 비난했어야 한다.⁶⁾

그러나 노동당, 사회변혁당,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사과
연 등 노동운동 좌파는 이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단체 이
름들을 걸고 사회배외주의 다수파와 함께 “경제보복 평화위협
아베 규탄 촛불” 집회를 공동개최했다. 한·일 자본 간 제국주
의적 무역전쟁을 “일본의 제국주의 공세”라고 축소 은폐하여
남한 제국주의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 제국주의에 항의하는
운동을 건설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반일 배외주의 광풍

6) 이러한 입장으로는 다음을 보라. “한·일 제국주의 무역전쟁 분쇄! 모든 배외주의·민
족주의 보이콧 캠페인 반대! 무역전쟁이 아니라 계급전쟁으로 나아가자!”, 남한 혁명적 공산
주의자·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공동성명, 2019년 7월 19일.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trade-war-between-japan-and-south-korea/>



▷ 2019년 7월 20일 <경제보복 평화위협 아베 규탄 촛불> 집회 웹사이트

을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포장해주기까지 했다.

한·일 무역전쟁은 미·중 무역전쟁과 마찬가지로, 격화하

고 있는 현 시기 제국주의 열강 간 패권쟁투의 일환으로서 제국주의적 경제전이다. 좌파가 이와 같이 “경제보복 아베 규탄”을 내세워 배외주의 캠페인에 동참하고 사회배외주의 다수파에 이끌려 가는 데는 정세인식 문제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 민족주의 다수파를 따라 남한 자본주의를 모종의 ‘종속 자본주의’로 보아 그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정하길 거부하고 있는 문제, 즉 근본적인 노선적, 강령적 차원의 문제가 있다.

4. “종속” 문제?

“민족자주” 슬로건의 사회제국주의적 본질

제국주의 나라에서 계급협조주의 좌익이 “종속”을 내세워 ‘자’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인하고, 그럼으로써 강대국 분쟁에서 ‘자’국 정부를 지지하며 사회배외주의/사회제국주의로 노골화한 대표적인 예가 있다. 바로 스탈린주의 일본공산당 (일공)이다.

1945년에 합법화된 이래 일공 강령의 핵심 특징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하는 데 있다. 1945년 이전에는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이었지만, 그 이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

다는 것이다. 1957년 9월에 일공 지도부가 발표한 (그리고 나중에 당 대회에서 채택된) 강령 초안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기본적으로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미 제국주의 및 미 제국주의와의 종속적 동맹관계에 있는 일본 독점자본이다. 일본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이지만, 사실상 미 제국주의에 의해 반(半) 점령된 종속국이다.”⁷⁾

일공은 이로부터, 당의 주 목표가 “인민민주주의혁명”이며, 이 혁명의 핵심 과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 달성이라고 결론지었다. 일공은 이 입장을 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이 넘는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세계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열강 중의 하나가 된지 이미 오래인 현재 까지도 말이다! 2004년에 채택한 강령에서 일공은 일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성격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이긴 하지만, 그 영토의 주요 부분과 군사 문제를 비롯한 그 밖의 국가 사안들에서 미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실상 종속국이다... 미국은 여전히 일본의 군사·외교 문제에 대한 상당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자신의 거대한 권력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일본의 경제

7) The Fifty Years of the Communist Party of Japan, p. 136

문제에 개입한다. 유엔과 그 밖의 국제 포럼에서 일본 정부 대표자들은 종종 미국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⁸⁾

한국의 계급협조주의 다수파가 내세우는 ‘자’국에 대한 종속국 성격규정 논리와 똑같다. ‘자’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은폐하기 위해 내세우는 “미국에 대한 종속”, “미국의 지배” 운운하는 논리도 똑같다. 이로부터 “민족자주” 임무를 도출하는 ‘자’국 방어 논리도 똑같다. 다음에서 보듯, 위 성격규정으로부터 나오는 일공의 강령적 임무는 사실상, ‘자주적인 제국주의’ 국가의 수립이다.

“일본 사회가 현재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혁명이 아니라 민주주의 혁명이다. 이 혁명은 미국에 대한 일본의 이례적인 종속과 대기업·재계의 폭압적 지배에 종지부를 찍는 혁명, 일본의 진정한 독립을 확보하고 정치, 경제, 사회에서 민주개혁을 실시하는 혁명이다. 이러한 것들은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실현 가능한 민주개혁이지만, 그 완전한 달성은 일본의 독점자본주의와 대미 종속을 대표하는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게로 국가권력을 이전하는 것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 민주적 변화를 이룩하는 데서 성공하면 인민을 고통 받게 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8) 2004년 1월 17일 일공 23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일공 강령, <http://www.jcp.or.jp/english/23rd-congress/program.html>

다수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는 자주/민주/평화의 일본을 건설하는 길을 닦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다. “자주/민주/평화” 자리에 자주/민주/통일을 대입하면 나무랄 데 없는 한국 자민통 강령이다! “대미 종속”으로 인해 현 일본 사회는 민주주의혁명 단계에 있다. 이 단계를 건너뛰어 직접적인 사회주의혁명을 내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혁명을 차단하는 ‘단계’ 설치의 구실로 “대미 종속”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독실한 옹호자로서 일공은 이러한 (인민)민주주의혁명 단계론과 계급협조주의 강령에 입각하여 중국·러시아·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모든 영유권 주장을 지지한다. 일공은 현 강령 속에서 “역사적으로 일본의 일부인 하보마이 제도와 시코탄 섬, 그리고 치시마(쿠릴) 열도의 일본 반환”을 요구한다. 일본 제국주의가 1905년 조선에게서 강탈한 독도의 경우에도 현재 일본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공은 이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공은 일본 제국주의의 굳건한 사회배외주의적 옹호자다. 같은 방식으로 한국 자민통도 남한 제국주의의 사회배외주의적 옹호자로 나서고 있다. “종속”을 내세워 ‘자’국 제국주의를 은폐, 면죄부를 부여하고, “자주”를 내세워 사회주의혁명을 차단하는 계급협조 기회주의가 이와 같이 사회배외주

의로 상향 변주하는 모습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는 어디서나 똑같다.

과거 전쟁에서 미국에 패전국이자 피점령국인 일본이 현재 까지도 군사·외교 면에서 미국에 종속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종속’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남반구 반식민지 인민들에 대한 거대한 초과착취 면에서 엄연히 제국주의 국가다. 이러한 대미 군사·외교적 ‘종속’은 과거 서독 제국주의에서도 있었고, 패전이나 피점령과는 관계없는 현재의 호주 제국주의에서도 존재한다. 미국을 패권국으로 하는 제국주의 세계질서에서 이러한 종류의 대미 종속과 해당 국가의 제국주의적 성격은 상호 모순되지 않으며 양립 가능해왔다. 이 점에서 제국주의 일본도 마찬가지고, 제국주의 한국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패권국 아닌 현 일본이나 현 한국이 민족자주를 필요로 한다고 ‘진지하게’ 주장하고자 한다면, 제국주의 열강들 중 패권국 미국을 빼고는 모두가, 즉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해 있는 독일, 이탈리아, 영국과 같은 열강들 모두가 민족자주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해야만 할 것이다.)

두루 알다시피 노무현 정부 이래 현 문재인 정부까지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은 친미 기초를 유지한 채 대미 군사·외교적 ‘종속’을 탈피한다며 “자주 국방”과 “자주 외교”를 추구해

왔다. 자민통 세력이 지금 내거는 “민족자주”라는 것이 과연 이러한 “자주국방”, “자주외교”와 얼마나 다른가? 이미 자민통 세력은 남한 사회의 경제적 “(신)식민지성” 주장에서는 슬그머니 한 발을 뺀 채 군사·외교적 “종속” 주장에 주력하고 있다. 또 같은 맥락에서 기존의 “민족해방”을 대신하여 “민족자주”를 내걸고 있다. 이제 경제적 토대 상의 “해방”은 빼고 단지 군사·외교상의 “자주”라면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의 “자주국방” “자주외교”에 많이 근접해진 셈이다. 이미 문재인 정권을 ‘탈미 자주화를 함께 시작하는 정권’으로 성격규정 하고 지지하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민족자주”를 “자주국방”/“자주외교”로 등치한다 해도 새삼스러울 게 없다. 계급협조주의 다수와 자민통 세력이 드러내놓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략적’ 동맹군으로 복무할 수 있는 노선적 접점도 이렇게 마련되었다.

“민족자주” 슬로건의 이 같은 계급협조 기회주의적 본질을 놓고 볼 때, 현 단계 남한에서 ‘민족자주를 과제로 하는 당면 민주변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본주의 토대 자체를 겨냥한 모든 중대한 투쟁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을 유리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눈에 흙먼지를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상 남한 제국주의의 자주국방과 자주외교를 위한 이른바 “사회대개혁”에 노동자계급이 앞장서자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주국방 자주외교’가 아니라 ‘미군 철수, 미군기지 해체’를 요구하고 투쟁한다. 우리의 ‘미군 철수!’ 요구 투쟁은 ‘민족자주를 과제로 하는 당면 민주변혁’의 일부가 아니라, 반 제국주의·반자본주의 당면 사회주의변혁의 일부다. 기회주의의 자민통 세력에게는 ‘미군 철수’ 요구보다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와의 계급협조가 우선이다. 따라서 우리의 ‘미군 철수’ 요구 투쟁은, 이 투쟁을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와의 계급협조에 종속시키는 ‘민족자주’를 위한 투쟁의 일부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의 ‘미군 철수’ 요구 투쟁은 한·미 제국주의 반대와 한·미 제국주의 동맹 분쇄를 위한, 한국 제국주의 부르주아 권력 타도를 위한 투쟁의 일부다. 우리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분리시키지 않았듯이, 미군 철수 투쟁 또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분리되어선 안 된다. ‘당면 민주변혁’이라는 이름으로 미군철수 투쟁을 자본주의 토대 자체를 겨냥한 투쟁과 분리시키려는 일체의 기회주의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따라서 미군 철수 투쟁은, 이 투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분리시키려는 계급협조 기회주의 세력과에 대한 가차 없는 투쟁과 긴밀히 결부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국이 제국주의 국가 리그에 진입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른바 “한국현대사”에서, 즉 ‘해방’ 이후 미군정 및 그 연장선상의 괴뢰 정권 하에서



▷ 2019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8·15 전국노동자대회

한국은 식민지였으며,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반(半)식민지 종속 경제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물론 이 시점에서는 이미 한국은 독점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단계였지만, 그럼에도 한국 독점자본이 타국에서 초과착취 하는 것보다 외국 제국주의 독점자본에 의해 초과착취 당하는 것이 더 컸고, 자본수출에 비해 자본수입이 훨씬 많았다. 이 점에서 당시까지 한국은 단지 군사·외교적 '종속'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종속적인 반식민지 독점자본주의였다. 그러나 2000년-2010년을 거치며 이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어 초과착취/자본수출 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독점자본의 세계시장에서의 지위 같은

핵심 지점에서 “(신)식민지성”을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변화 앞에서 자민통/엔엘 세력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래에 들어와 “(신)식민지성”과 “민족해방”을 슬그머니 뒷전으로 물리고 대신에 “종속”과 “민족자주”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했다. (“반미” 대신에 “탈미”를 내거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용어 변경 차원을 넘어, 기존의 수줍은 계급협조주의에서 공공연한 계급협조주의로,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에 대한 ‘비판적 지지’에서 전략적 동맹으로, 기회주의에서 그 완결판인 사회배외주의로 격상해가는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해방’ 이후의 “한국현대사”에 호소하여 “(신)식민지성”을 내세우기에는 *현 단계 남한 사회구성체의 경제적 사실*들과 너무도 동떨어지다보니 공여지책으로 군사·외교적 “종속”을 내세워서라도 자신들의 남한 제국주의 지지를 감추려 시도하고, 나아가 ‘자’국 제국주의에 대한 사회애국주의적 방어를 은폐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백년도 더 전에 <<제국주의론>>의 저자 레닌이 제국주의 세계질서 속에서 이런 종류의 “종속”을 혁명 노선 속에 어떻게 위치 짓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라. 당시 망명지 스위스에서 레닌은 스위스 사회민주당 당원으로 당내 좌파와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

서 당 대회 문서들을 준비했는데, 이 문서들에서 레닌은 스위스 부르주아 정부에 대해 제국주의 강대국에 완전하게 종속되어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스위스를 제국주의 국가라고 명시하며 “직접적 사회주의혁명”을 내걸고 있다.

“스위스 부르주아 정부는 제국주의 ‘대’국의 부르주아지와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긴밀히 묶여 있고, 그들 대국에 완전하게 종속되어 있다...

[이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대답은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타도하고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 대중행동을 선전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스위스 제국주의의 특수성은 다름 아니라 스위스 부르주아지가 무권리의 외국인 노동자를 점점 더 가혹하게 착취하고 있다는 데 있다. 스위스 부르주아지의 희망의 거점은 이들 두 범주의 노동자 간의 사이를 벌려놓는 데 있다.”⁹⁾

“따라서 스위스와 관련해서도 ‘조국 방어’는 이제 위선적인 공문구 이상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서의 문제는 민주주의나 자주독립, 또는 광범한 주민 대중의 이익 등등

9) 레닌 <스위스 사회민주당 내 치머발트 좌파의 임무>,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361쪽, 375쪽

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르주아지의 독점과 특권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와 소농민을 살육장으로 던져 넣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자본가의 지배와 정치적 반동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15년 아라우 당 대회에서 이미 승인된 혁명적 대중투쟁의 목표로서, 당은 스위스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내건다. 이 변혁은 경제적으로 즉각 실현 가능하다...

당은, 임금노예의 처지 개선을 위한 투쟁을 멈추는 일 없이, 노동자계급과 그 대표자들에게... 스위스에서의 직접적 사회주의혁명을 선전하는 임무를 일정에 올리라고 호소한다. 이 선전은 부르주아 정부를 무산 주민 대중의 지지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 정부로 대체할 필요를 논증하고, 은행 및 대기업의 몰수·수탈, 일체의 간접세 폐지, 고액 소득에 대해 혁명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단일 직접세의 실시 등과 같은 조치가 절실히 필요함을 설명하는 것이어야 한다.”¹⁰⁾

레닌은 스위스 부르주아 정부가 독일이나 영·불 같은 당시 최대의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결코 “민족자주”와 민주주의혁명 ‘단계’를 얘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위스에서 자본의 지배를 타도하고 부르주아 정부를

10) 레닌 <전쟁에 대한 스위스 사회민주당의 태도 (테제)>, 레닌전집 64권 (“암시즘의 회화 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382, 383, 384쪽

프롤레타리아 정부로 대체하는 “직접적 사회주의혁명”을 얘기한다. 스위스 부르주아 정부가 제국주의 강대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과 “스위스 부르주아 정부가 ‘부르주아 정부’일 뿐 아니라 스위스 은행자본들과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제국주의 부르주아 정부라는 사실”¹¹⁾은 전혀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스위스 정부의 대독 또는 대영·불 “종속”과는 관계없이 스위스는 다른 식민지·반식민지 나라들 및 국내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에 의해 노동자계급의 특권적 ‘상층’을 노동 귀족으로 매수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초과이윤을 뽑아내는 제국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위 문장에 “스위스” 대신 “한국”을 대입해도 어느 한 점 어색함이 없다. 문재인 부르주아 정부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과, 문재인 부르주아 정부가 ‘부르주아 정부’일 뿐 아니라 한국 독점자본·금융자본들과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제국주의 부르주아 정부라는 사실은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바로 이 제국주의 부르주아 정부에게 우리의 제국협조주의 다수파가 “탈미·자주”를 함께 시작할 정부라고 기대를 걸고 지지를 보내며 전략적 동맹군으로 복무하겠다는 선서를 한 것이다. 이로써 다수파 자민통의 ‘자주’가 무엇을 실제 내용으로 하는 슬

11) 레닌 〈H. 그로일리히의 조국방위 옹호에 대한 열두 개의 짧은 테제〉, 레닌전집 65권 (“면 곳에서 보낸 편지들”), 이정인 옮김, 아고라, 167쪽

로건인지, 어떠한 계급적 성격을 갖는 슬로건인지 밝히 드러나 버렸다. 군사·외교적으로 보다 자주적인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자는 슬로건이다. 남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가 부리는 노동운동 내 하수인들의 사회제국주의 슬로건이다.

이와 같이 “민족자주”는 남의 깃발, 적군의 깃발, 자본의 깃발이다. 계급협조주의 다수파가 남한 제국주의 부르주아 정부의 전략적 동맹군으로 복무하며 노동자들 사이에서 자본가계급의 깃발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또 현 시기 계급투쟁에서 “민족자주”는 배반자적인 계급휴전 사회배외주의 슬로건으로 자본에 봉사한다. 기회주의 다수파가 노동자들 속에서 계급협조 사상을 유포하는 매개로 사용하고 있는 ‘토착왜구’, ‘한일전’ 같은 사회배외주의 프레임이 노동운동에 난 데 없이 돌출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자본의 기치, 기만적인 “민족자주” 슬로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이며, 거기에 정확히 부합한다.



▷2019년 8월1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노조 집회

5. 사회배외주의 - 계급협조 기회주의의 완결판

남한이 제국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길 거부하고 기만적인 “종속” “자주”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선적 약점으로 인해 좌파는 그 동안 다수파의 계급협조주의에 대하여 싸우지 못해왔고, 따라서 계급협조주의가 노동운동을 지배하는 것을 무기력하게 허용해왔다. 이제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남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집사라는 사실 또한 인정하길 거부하는 좌파는 계급협조 기회주의의 극치인 사회배외주의와의 투쟁도 회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부르주아 지지자들, 반 미통당 자유주의자들이 한·일 무역전쟁 이후 대중적 반일 정서를 매개로 애국주의·배외주의의 물이를 대대적으로 펴고 있다. (이들이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와 함께 조국 장관 방어부대를 이룬 세력들이다. 여기서도 ‘조국방어’ 세력들이다!). 이 “반일 국뽕”은 한국의 첨단산업 찬양을 거쳐 삼성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특히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의한 한국의 “국격 상승”을 내걸고 국수주의·배외주의 감정을 전방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총선 국면에서 미통당 등 ‘수구 세력’을 겨냥한 “토착왜구”, “한·일전” 프레임은 문재인 지지자들의 이러한 배외주의 물이의 정점을 이루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우리의 노동운동 다수파가 받아 안고 문재인 정부 지지 물이에 합세한 것이다. 같은 배외주의라도 부르주아·소부르주아의 배외주의와 구별하여 노동운동의 배외주의를 ‘사회배외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직접 노동자들 속에서 계급투쟁(국내평화) 배외주의를 조장하고, 그리하여 노동자들 속에 부르주아지의 영향력을 실어 나르며 노동자계급을 부르주아지에게 종속시키고자 하는 아주 위험한 내부의 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회배외주의는 노동운동 내 새로운 흐름이 아니

라, 계급협조 기회주의의 직접적인 연장이자 그 완성이다. 1차 제국주의 세계대전 당시 인터내셔널 결의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주의 타도)를 배반하고 “조국방어”를 내걸고 ‘자’국 지배계급의 전쟁 수행을 지지한 사회배외주의 세력이 기존의 노동운동 우파 기회주의 세력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술적으로 동일한 세력임을 추적 확인한 레닌은 “사회배외주의는 기회주의의 완결판”이라고 결론지었다. 왜 ‘완결판’이나 하면, *사회배외주의는 제국주의 시대에 완성된 기회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일 제국주의 무역전쟁을 계기로 계급협조 기회주의 다수파와 문재인 자본가 정부 간의 은밀한 동맹이 공공연한 동맹으로 전화되었듯이) 제국주의 전쟁은 “기회주의자들과 부르주아지 간의 은밀한 동맹을 공공연한 동맹으로 탈바꿈시켰다.”¹²⁾

“우리가 말하는 사회배외주의란, 현 제국주의 전쟁에서 조국방어 사상을 수용하고, 이 전쟁에서 사회주의자와 부르주아지·‘자’국 정부 간의 동맹을 정당화하며, ‘자’국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혁명적 행동을 선전하고 지지하기를 거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아주 명백하게도 사회배외주의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적·정치적 내용은 기회주의의

12) 레닌 〈사회주의와 전쟁〉,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46쪽

토대와 완전히 일치한다. 그것은 동일한 하나의 경향이다. 1914-15년 전쟁의 조건 속에서 기회주의는 사회배외주의로 귀착되었다. 계급협조 사상은 기회주의의 주 특징이다....

기회주의란 극소수 노동자들의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대중의 근본적인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 달리 말하면 프롤레타리아트 대중을 적으로 하여 일부의 노동자와 부르주아지 간에 동맹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은 이러한 동맹을 특히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했고 피할 수 없게 했다. 특권적인 노동자층의 비교적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이 그들이 ‘부르주아화’한,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 민족의 자본가들이 식탁에서 흘린 빵 부스러기를 던져준 - 또 그들을 영락하고 궁핍화한 대중의 고통과 비참, 그리고 혁명적 기질로부터 격리시킨 - 저 수십 년 간의 자본주의 발전기에 고유한 특징들이 바로 이 기회주의를 낳아놓은 것이다. 제국주의 전쟁은 바로 이러한 상황의 직접적인 계속이자 완성인데, 왜냐하면 이 전쟁은 대국 민족들의 특권을 위한, 식민지의 재분할과 타 민족들의 지배를 위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소부르주아 ‘상층’, 또는 노동자 계급의 귀족층(및 관료층)으로서의 그 특권적 지위를 지키고 강화하는 것, 이것이 소부르주아적인 기회주의적 희망과 그에 조응하는 전술의 자연스런 계속, 전시 상황에서의 자연스런 계속이다. 이것이 오늘 사회제국주의의 경제적 토대다.”¹³⁾

13) 레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레닌전집 59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양효식 옮김, 아고라, 271-2쪽

개량주의·기회주의가 그렇듯이, 그 “직접적인 계속이자 완성인” 사회배외주의도 일시적인 이데올로기적 흐름이 아니라 물질적·경제적 토대 위에 서있는 사회·정치 세력이다.

“사회배외주의와 기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는 동일하다. 즉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대중을 적으로 하여 노동운동의 한층의 ‘상층’이 ‘자’국 부르주아지와 맺은 동맹이며, 부르주아지에 게 착취당하고 있는 계급을 적으로 하여 부르주아지의 종복과 부르주아지 사이에 맺은 동맹이다. 사회배외주의는 완성된 기회주의다. 사회배외주의와 기회주의는 그 정치적 본질에서 동일하다. 계급협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부인, 혁명적 행동의 폐기, 부르주아적 합법성에 순종하기,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불신과 부르주아지에 대한 신뢰 등에서 동일하다. 정치적 사상도 동일하고, 그들 전술의 정치적 내용도 동일하다. 사회배외주의는 밀레랑주의와 베른슈타인주의와 영국의 자유주의 노동자정치의 직접적인 계속이자 완성이고, 그것들의 총화이자 총결산이며 최고의 성취물이다.”¹⁴⁾

6. 노동귀족층 기반을 공유하고 있는 좌파

계급협조 기회주의 다수파는 노동운동에서는 다수지만, 전

14) 레닌 〈기회주의와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307-8 쪽

체 노동자계급에서는 노동자 대중을 적으로 하여 한줌의 ‘상층’만을 대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계급협조 기회주의 세력이 노동운동에 대해 (일시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남한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초과이윤 덕이며 그것에 뒷받침을 받고 있다. 독점 부르주아지는 소수의 상층 노동자를 계급협조주의로 유도하고, 모종의 동맹 - 즉 프롤레타리아 대중에 대항하는, 기회주의 다수파와 자유주의 부르주아지 간의 동맹, 그리고 한국의 노동자와 자본가가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일본에 대항하여 맺는 동맹 - 을 만들어내는 데에 이 초과이윤의 일부분(그럼에도 적지 않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로 그렇게 할애했다. 한국에 앞서 이미 모든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특권적 상층부는 수억 반식민지 인민들에 대한 초과착취에서 나오는 초과이윤의 일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레닌은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내의 분열>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한줌의 부국들은... 독점을 거대한 규모로 발전시켰고, 수십억은 안 될지라도 수억에 달하는 초과이윤을 획득하고 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수억 주민들의 등 위에 ‘타고 앉아서’, 특히 풍부하고, 특히 기름지며 손쉬운 노획물의 분할을 위해서로 싸우고 있다....

제국주의 ‘대’국의 부르주아지는 그 초과이윤이 연간 약 10

억 프랑에 달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자’국 노동자의 상층에 1억 프랑쯤을 지출함으로써 이 상층을 매수할 수 있는 경제적 가능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 작은 ‘떡고물’이 노동 장관들, ‘노동자 의원들’, 전시산업위원회의 노동자위원들, 노동관료들, 편협한 직업별 노조 소속 노동자들, 사무소 직원들 등등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가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¹⁵⁾

“제국주의의 변호론자들인 노골적인 사회배외주의자들”¹⁶⁾이 기반하고 있고 대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특권적 노동자 상층이다. 오늘 한국에서 대사업장 정규직 노동자의 상당 부분을 이루는 이 노동귀족층이 흔히들 말하는 ‘민주노조운동 개량화·관료화’의 기수들이고, 오늘 민주노총 조합원 대증을 비롯한 미조직 노동자 대중 속에까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상을 유포하고 있는 진원지다. 이 한줌의 노동귀족층(및 노조 관료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경제적 사실(제국주의 초과이윤에 의한 ‘떡고물’ 등)과 *계급 상호관계에서의 변화*는 “제국주의 시대의 객관적 조건이 지시하는 노동운동 전술의 초점이다.”¹⁷⁾

“기회주의자들(사회배외주의자들)은 다름 아니라 아시아

15) 레닌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분열>,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311-2쪽

16) 같은 글 299

17) 같은 글 309

와 아프리카의 등 위에 올라 타 제국주의 유럽을 만들어내기 위해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에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객관적으로 기회주의자들은 소부르주아지의 일부이며, 또한 제국주의적 초과이윤에 매수되어 자본주의의 경비견이자 노동운동을 타락시키는 자로 전향해버린 노동자계급 특정 층이라는 것”¹⁸⁾

마찬가지로 자민통/NL로 통칭되는 남한 노동운동 다수파도 수억 반식민지 인민들의 등 위에 올라타 제국주의 코리아를 만들어내기 위해 문재인 자본가정부에게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계급협조 기회주의 다수파는 소부르주아지의 일부이며, 부르주아지의 종북, 따까리이자 부르주아지의 영향을 실어 나르는 전달자로서 노동운동을 타락시키는 자들이다. “노동운동이 이들 기회주의자들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면*, 노동운동은 부르주아적 노동운동으로 머무르게 될 것이다.”¹⁹⁾ 이와 같이 “제국주의의 객관적 조건이 지시하는 노동운동 전술의 초점”은 자본과의 투쟁을 계급협조주의 세력과의 투쟁과 뿔 수 없게 합체시키는 데 있다. 노동운동 내 자본가계급의 마름과의 투쟁 없이 자본가계급과의 투쟁은 없다!

부르주아 노동운동, 즉 계급협조 기회주의 다수파가 지배하

18) 같은 글 303

19) 같은 글 305

는 노동운동은 모든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그 정치적 표현으로서 부르주아 노동자당을 만들어낸다. “모든 나라에서 부르주아지는 이미 자신을 위해서 사회배외주의자들의 ‘부르주아 노동자당’을 낳고 기르고 보호해왔다.”²⁰⁾ 진보당과 같이 뚜렷한 형태를 갖춘 당²¹⁾과, 말하자면 반쯤 형태를 갖춘 각종 “진보민중단체”, 연합조직 등과 같은 준(準)당 간의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볼 때 노동귀족층이 부르주아지 측으로 탈주할 조건이 무르익었고, 기정사실로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사실이, 이러한 계급 세력 관계에서의 변동이 어떠한 꼴로든 정치적 형식을 발견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²²⁾

“이와 같은 경제적 기초 위에서 현대 자본주의의 정치적 제도들 — 언론, 의회, 노동조합, 정당 등 — 이 품위 있고 온순하며 개량주의적이고 애국주의적인 사무고용원들 및 노동자들의 경제적 특권과 떡고물에 대응하는 정치적 특권과 떡고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정부나 전시산업위원회에서의 직책이나 의회와 다양한 위원회들에서의 직책, ‘품위 있는’ 합법 신문의 편집진, 또는 못지않게 품위 있는 ‘부르주아적 준법’ 노

20) 같은 글 314

21) 정의당은 부르주아 노동자당보다는 그냥 부르주아 당이다. 정의당은 노동운동에도 일부 발을 걸치고 있지만, 주로 소부르주아·중간계급 대중에 기반하고 있다. 이 기반을 민주당과 공유하며 동시에 이 기반을 놓고 민주당과 다툰다.

22) 같은 글 314

동조합의 운영위원회에서의 직책 등, 이와 같이 수입이 괜찮은 안락한 제도권 자리들이 바로 제국주의적 부르주아지가 ‘부르주아 노동자당’의 대표자들과 지지자들을 유인하고 보상하는 미끼인 것이다.”²³⁾

부르주아지에게 봉사하는, 그것도 다름 아닌 노동자들 속에서 부르주아지에게 봉사하며, 부르주아지의 영향을 다름 아닌 프롤레타리아트에게로 실어 나르는 부르주아 노동자당/부르주아 노동운동에 대해 모든 전선에서 결연하고 가차 없는 투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사회주의도, 노동자권력도, 사회주의 노동운동도 다 공리공담이 될 뿐이다.

그러나 좌파는 부르주아 노동자당/부르주아 노동운동과의, 즉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와의 투쟁을 회피한다. 그 때문에 노동운동이 이들 기회주의자들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부르주아 노동운동으로 머무르게 되는 데 좌파도 일조한다.

좌파는 현재 계급협조주의 다수파가 노동자 대중을 적으로 하여 문재인 자본가정부와 전략적 동맹을 맺고 있다는 사실, 그로 인해 노동자계급이 정치적 독립성을 잃고 부르주아지에게 종속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남한 제국주의 독점 부르주아지가 소수의 특권적 상층 노동자를 계급협조주

23) 같은 글 315

의로 유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대중에 대항하는 전략적 동맹을 만들어내는 데에 제국주의 초과이윤의 일부를 할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좌파는 남한 제국주의의 이러한 경제적 사실과 그에 따른 계급 세력관계의 변화를 인정하길 거부한다. 그리하여 노조운동에서 한 귀퉁이를 차지하는 것에, ‘만년 결방살이’로 남아 있는 것에 만족해하며,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이 계급협조 기회주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개량주의 노동운동으로 머무르게 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좌파 또한 다수파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대중과는 구별되는 한줌의 노동귀족층에 운동기반을 두고 있는 데서 비롯한다. 노동운동의 소수파로서 좌파도 동일한 노동귀족층/노조관료층 기반 위에서 있는 것이다. 좌파가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에 대해 “모든 전선에서 결연하고 가차 없는 투쟁을 벌이지 않는”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7. 좌파의 노선적 후퇴 :

사회주의혁명 노선의 폐기인가?

위에서 언급한 좌파의 노선적 취약성은 이제 점점 더 노동

귀족층에 영합하면서 노선적 후퇴, 타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회주의혁명 노선을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남한 국가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인정하길 거부하며,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의 “신식민지” “종속” 이데올로기와 “민족자주” 슬로건의 기만적인 부르주아적 성격을 노동자들 속에서 폭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더욱 더 견인될 경우 노선적 타락은 어느 면에선 예견된 일이다. 특히 계급협조주의 다수파가 자본가정부를 위한 전략적 동맹군으로 복무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정세 속에서 견인되고 있다면 말이다.

최근 좌파는 새롭게 “사회주의”를 내거는 것으로 계급협조 다수파의 ‘민주 대 반민주’ 프레임 및 민족주의와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그러나 이 “사회주의”는 사회주의혁명의 프로그램·전술로 제출된 사회주의가 아니다. 너무 일반적이며 너무 막연하게도 그냥 목표로서의 ‘사회주의’ 일반, 자본주의의 대립물로서의 사회주의 일반이다. 이런 사회주의라면 계급협조주의자들도, 개량주의자들도 다 인정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깃발은 올렸지만, 이 깃발에서 *사회주의혁명*은 먼 훗날에나 가능한 일, 사실상 언제인지 보이지도 않는 먼 미래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사회주의혁명 투쟁을 대신하여 “전투적 노동조합 투쟁”이, 사회주의혁명 강령·전술을 대신하여 “전투적 노동조합의 요구”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한 예를 보자. ‘혁명

적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최근 노동당, 사회변혁당과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논의를 함께 하고 있는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 (이하 노해투)은 얼마 전 <오늘날의 사회주의 강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날 쇠퇴기 자본주의' 조건에서는 최소강령적 기본 요구를 위한 "전투적 노동조합 투쟁"으로 사회주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동안 노동운동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상당한 대중적 확대를 이룩했고, 노동운동이 전체 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정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한국에서 자본주의가 상승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노동운동의 대중적 투쟁요구와 사회주의 강령 사이의 간극은 좁아지고 있다....

오늘날 한국 노동운동은 여전히 준비기의 과제에 머물러 있다. 한국 노동자계급이 당장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최대강령을 실현할 준비가 돼 있다거나, 그것이 당면의 직접적인 투쟁요구로 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주의자는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 모든 해고 금지, 생활임금 쟁취, 중대재해 처벌 특별법 제정 등 오늘날 한국의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는 진실로 그것을 실현하려는 투쟁과 연결

된다면, 이행강령의 성격을 떨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와 맞장 뜨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이윤논리를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고서는, 자본가국가의 억압에 맞서 노동자 총단결로 맞받아 치지 않고서는 결코 실현할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서 사회주의로 진격하지 않고서는 결코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혁명이기 아닌 준비기에 노동조합은 노동자대중의 고유한 투쟁기구로 전면에 부상한다. 게다가 자본주의 쇠퇴 시기에 노동조합의 사활적인 기본 투쟁강령은 이행강령의 요구와 중첩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 강령은 전투적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 안는 것과 떨 수 없이 연결된다. 전투적 노동조합의 요구들과 분리된 채, 즉 당면 계급투쟁의 실제 요구들과 분리된 채 무언가 사회주의적인 것 같은 멋진 차별적 요구들을 고안하려는 것은 진정한 사회주의 강령의 정신과 동떨어진 것이다...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노동조합을 비롯해 노동자 민중의 조직들이 제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이 기본 요구들이 단순히 준비기 요구로서만이 아니라 이행강령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⁴⁾

24)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 최영익 〈오늘날의 사회주의 강령〉 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online1&wr_id=632&page=4

간단히 말해서 노동운동이, 노동자계급이 직접적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을 수행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쇠퇴기 자본주의’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당면 투쟁 요구조차도 사회주의혁명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 등 최소강령 요구 수준의 기본적인 당면 요구로도 충분하다.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정부’ 같은 이행강령의 다른 핵심 요구들 없이도 말이다. 즉 최대강령과 맞닿아 있는 ‘은행·대기업 몰수’, ‘평의회와 민병, 공장위원회에 기반한 노동자정부’ 같은 요구들을 함께 내걸지 않아도, 최소 당면 요구만으로도 ‘쇠퇴하는 자본주의’ 조건 때문에 혁명적 강령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최소 당면 요구들을 위한 “전투적” 노동조합 투쟁은 ‘쇠퇴기 자본주의’ 조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대강령 요구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므로!

쇠퇴하고 썩어 들어가는 (부후화 하는) 자본주의 하에서, 계속되는 공황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고는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현 시기 자본주의 하에서 재앙과도 같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대답은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타도하고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사회주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혁명적 대중행동을 선전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임무는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단말마적 고통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반동적 공격에 대항하는 혁명적 대중투쟁 전술을 체계적이고 끈질기게 선전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감행해야 하며, 그리하여 대중에게 이 고통과 재앙의 진정한 성격을 설명해야 한다.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임무는 “개량주의적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 투쟁을 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일시적 곤란과 패배에 굴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집요하게 그러한 혁명적 투쟁을 선전하고 준비하는 것이다.”²⁵⁾

이와 같이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직접적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이행강령을 내걸 것을 요구한다. 또 혁명적 대중행동 전술을 요구한다. 그러나 노해투는 쇠퇴하는 자본주의 덕분에 최소당면 요구들로 제한해도 된다고 한다. 또 혁명적 대중투쟁 전술을 대신하여 “전투적 노동조합 투쟁” 전술로 한정해도 된다고 한다. ‘쇠퇴하는 자본주의’가 오히려 사회주의혁명 강령·전술을 폐기하기 위한 알리바이가 되고 있다.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주의, 쇠퇴 사멸하는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이행해가는 자본주의는 레닌의 표현대로 “프롤레타리아 사회혁명의 전야”다. 물론 우리는 이 ‘시대’ 범주를 소(小)시기 정세 규정으로 오인하여 그로부터 항상 ‘혁명적 정세’를 기계적으로 도출

25) 레닌 〈스위스 사회민주당 내 치머발트 좌파의 임무〉,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아고라, 364쪽

하는 오류에 빠져선 안 되며, 이 시대 내 해당 시기의 구체적인 계급 세력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세 파악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노해투처럼 “준비기” 논리로 사회주의혁명 강령·전술을 폐기하고 그것을 최소요구와 “전투적 노동조합 투쟁” 전술로 대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것은 ‘혁명적 사회주의’가 아닌 경제주의이며, 따라서 노동자의 소수층의 일시적 특권을 대변하며 대중의 근본 이익을 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회주의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자들은 ‘은행·대기업 몰수’와 ‘노동자정부’ 같은 요구강령을 받아들이는 것도, 직접적 사회주의혁명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느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준비시키는 데 착수하는 것을 먼 훗날로, 막연한 미래로 연기하고 지체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준비기”는 말 그대로 준비 임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정세 조건에 관한 것이지, 준비 임무를 폐기하고 후퇴와 타락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

직접적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체계적인 선전을 즉각 전개하고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준비시키는 데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는 ‘비정규직 철폐’ ‘모든 해고 금지’ 같은 최소

당면 요구 투쟁에 대해서는 기권해도 괜찮다는 의미인가? 직접적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이 우리가 개량을 위한 투쟁을 방기할 수 있거나 방기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성공을 이룰 것인지, 객관적 조건이 얼마나 빨리 이 혁명의 발발을 가능케 할 것인지 미리 알 수 없다. 우리는 모든 개선, 대중의 처지를 바꾸는 모든 실질적인 경제적·정치적 개선을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 우리와 개량주의자들(즉 계급협조주의 다수파) 간의 차이가 그들은 개량을 찬성하는 데 반해 우리는 개량을 반대한다, 이런 것인가? 아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개량에 자신을 가두며, 그 결과 허리를 굽혀 자본주의의 간호병 역할을 구걸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비타협적으로, 요구를 구부리지 말고 투쟁합시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직접적 사회주의혁명이라는 생각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이 혁명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 조직 활동의 모든 영역을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가장 으뜸가는 임무로 삼읍시다.’

위대한 역사적 강령의 공표가 거대한 의의를 지닌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강령은 혁명적 계급의 이름으로 선언되어야 하며, 그 혁명적 계급의 강령은 두려움 없이 완전

하게 공표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주의 강령”을 선언하면서 선언에서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은 채로 놔둠으로써 운동의 경제주의적·조합주의적 타락을 가중시키는 것, 그것은 사회주의자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오늘 좌파가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와의 투쟁을 노동운동의 주요한 임무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그리고 또한 좌파가 점점 중도주의자들의 자리로 이동해가고 있는 이유다. “자본주의와 맞장 뜨”고 “사회주의로 진격”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주의혁명을 내부에서 가로막고 있는 계급협조 다수파에 대해서 어떠한 투쟁도 수행하지 않을 때 이것이 카우츠키적 중도주의 정치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무력한 공문구와 좌익적 호언장담과 기회주의적 실천의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8. 자본과의 투쟁을 노동운동 내 자본 마름과의 투쟁과 떨 수 없이 결부시켜야 한다

혁명가들은 부르주아 노동자당/ 부르주아 노동운동이 기반하고 있는 한층의 특권적 소수 노동귀족층과 “진정한 다수인 프롤레타리아 ‘하층 대중’”을 구분하고, 그 하층 대중에게 호소

한다. 이것이 바로 맑스주의적 전술의 핵심이다!”²⁶⁾ 계급협조주의 다수파가 대표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소수층 밖에 없다. 좌파가 이 특권적 소수층을 두고 다수파와 경쟁한다는 것은 스스로 계급협조주의 높으로 빠져드는 것을 뜻할 뿐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더 낮고 더 깊게 현실의 대중 속으로 내려가 계급협조 기회주의 세력과의 가차 없는 투쟁에 의해 노동자 대중과 새로운 노동자 전위를, 혁명을 위해 교육하고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가 여전히 사회주의자이기를 원한다면, 더 낮고 더 깊게 현실의 대중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것이 기회주의와의 투쟁의 모든 의미이며 모든 내용이다. 기회주의자들과 사회배외주의자들이 실제로는 대중의 이익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노동자 가운데 소수층의 일시적 특권을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부르주아 사상과 영향의 전달자라는 사실, 그들이 실제로는 부르주아지의 동맹자이며 하수인이라는 사실,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우리는 대중에게 그들의 진정한 정치적 이익을 분간하는 것을 가르치고, 제국주의 전쟁과 제국주의 휴전의 모든 길고 고통에 찬 정세 변전을 거쳐 사회주의를 위해, 혁명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가르친다.

26) 레닌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분열〉, 레닌전집 64권 (“맑스주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320쪽

기회주의와의 단절이 피할 수 없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대중에게 설명하는 것, 기회주의와의 가차 없는 투쟁에 의해 대중을 혁명을 위해 교육시키는 것, 민족적 자유주의 노동자 정치의 온갖 추악함을, 은폐가 아니라 폭로하기 위해서 전쟁의 경험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세계 노동운동에서 단 하나의 맑스주의적 방침이다.”²⁷⁾

자본주의 지배계급이 성공적으로 그 지배를 지속해온 것은 지배계급 자신의 내적 힘 때문이 아니라 지배계급이 노동운동 내 기회주의의 다수파로부터 받는 지지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힘은 자본주의 자체, 또는 자본주의 제도·기구들에 있지 않다. 자본주의가 살아남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본주의가 노동자 조직들 속에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오직 그 때문이다.

성공한 사회주의혁명인 러시아 혁명의 과정에서 보듯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열에 아홉은 노동자 조직들 속의 부르주아 영향력에 대항하는 투쟁, 노동운동 내 부르주아지의 시종, 대리인과의 투쟁이다. 자본과의 투쟁과 노동운동 내 자본마름과의 투쟁은 분리될 수 없다. 기회주의·사회배외주의와의 투쟁 없이 자본주의·제국주의와 투쟁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남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투쟁을 계급

27) 같은 글 320-1쪽

협조 기회주의 다수파에 대항하는 투쟁과 뗄 수 없이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오늘 남한 제국주의 하에서 노동운동 전술의 중심축이다.

* * *

[보론] 남한 제국주의 하에서 “당면 민주주의혁명” 노선?

남한이 “미제국주의에 의해 예속되어 있”는 “식민지적 자본주의”라고 규정하면서도,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 지지에 반대하고 “혁명”을 내거는 민족해방 경향의 세력도 있다.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가 지난 4월 초에 낸 〈현 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 (현 정세에 대한 인식과 실천과제)〉²⁸⁾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혁명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며, ‘사회주의 대중화’와 ‘사회주의 강령’을 내걸지만 개량주의·의회주의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좌파를 겨냥하여 “한국 노동운동 일각에서 보듯이

28)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http://dli.nodong.net/gnu5/bbs/board.php?bo_table=webzine&wr_id=763&sca=%EC%84%B8%EA%B3%84%EC%A0%95%EC%84%B8\(%EA%B2%BD%EC%A0%9C\)](http://dli.nodong.net/gnu5/bbs/board.php?bo_table=webzine&wr_id=763&sca=%EC%84%B8%EA%B3%84%EC%A0%95%EC%84%B8(%EA%B2%BD%EC%A0%9C))

혁명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기치로 내세우는 것은 기만이다”라고 선포한다.

훌륭하다! 그런데 <현 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하 <현 정세...>)이 “전제로 하는” 혁명은 자본의 지배를 타도하고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잡는 혁명, 즉 사회주의혁명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다. 권력이 자본가계급의 수중에 그대로 있는 “당면 민주주의 혁명”이다. “한국 노동자·민중의 당면한 역사적 과제: 민주중도 급진적 민주주의 혁명”을 말하며, 직접적인 사회주의혁명에 반대한다.

현 시기 한국 사회에 당면한 혁명은 자본가권력을 타도하는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 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고자 기만적인 ‘민주 대 반민주(“파쇼”)', ‘식민지적 천민자본주의 대 건강한 자주적 자본주의’ 프레임을 노동자들에게 들씌우려 한다. “민주주의 혁명과 민족해방 혁명 같은 중간적 단계들을 한꺼번에 건너뛰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따라서 좌익기회주의이다.” 건너뛰고 말고 할 그러한 “단계” 설정의 근거 자체가 없는 현 남한 사회에서 “당면의 민주주의 혁명” 단계를 내세워 노동자권력과 사회주의혁명을 가로막으려 한다.

“국가보안법과 국정원, 집시법을 비롯한 반민주악법, 노동자의 단결 투쟁을 원천봉쇄하는 노동악법 등... 파쇼헌법”

에 입각한 “파쇼적 정치체제와 그것의 물적 토대인 지대추구적 천민자본주의 경제체제(재벌과 부동산 소유자의 수탈)를 해체”하는 “과제부터 도전해야 한다.” 단계를 건너뛰어 “높은 단계의 혁명” 과제에 동시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즉 “파쇼적 정치체제”를 해체하는 과제부터 도전해야지, 그와 동시에 의회민주공화제의 자본가적 본질을 건드리는 과제에 도전해선 안 된다. 반민주악법과 노동악법 철폐 과제부터 도전해야지, 그와 동시에 경찰·관료·군대 등 억압 국가기구 철폐 과제에 도전해선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억압기구를 대체할 인민무장/프롤레타리아 민병과 노동자평의회 구성 과제에도 도전해선 안 된다. 또 “지대추구적 천민자본주의”를 해체하는 과제부터 도전해야지, 그와 동시에 고도로 발달한 남한 독점자본주의 자체를 침해하는 과제에, 즉 은행·대기업 몰수, 노동자통제 하의 국유화 같은 과제에 도전해선 안 된다. 일단은 최소요구만 따로 떼어내서 내걸어야지 처음부터 최소요구와 최대요구를 잇는 이행강령 풀세트로 내걸어선 안 된다. 처음부터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민주주의 투쟁에 결합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따라서 좌익기회주의이다.”

당면 혁명은 “파쇼적 정치체제를 해체하는” 단계의 혁명, “지대추구적 천민자본주의를 해체하는” 단계의 혁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연한다. “그 단계에서도 인간해방·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중간적 단계들을 한

꺼번에 건너뛰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따라서 좌익기회주의이다.” “추구”는 하되 건너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추구”라는 말로 연속혁명의 뉘앙스를 풍기지만, 결국은 동시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쇠퇴·사멸하는 자본주의 하에서, 그것도 파국적 공황기에 당면 최소요구와 최대요구를 가교로 있는 이행강령을 (<임박한 파국, 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같은 요구강령조차도) 내걸어선 안 된다는 것이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민주주의 투쟁에 결합시키려고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발달이 지체되고, 따라서 반봉건적 과제가 걸려 있는 나라들에서 맑스주의자들은 연속혁명의 관점에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단계’를 구분했다. (역으로 그렇지 않은 나라들, 즉 반봉건적 과제가 해소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그러한 ‘단계’ 구분의 필요도 따라서 해소된다.) 연속혁명을 거부하고 양자 사이에 차단벽을 쌓는 혁명 ‘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각 단계에 고유한 과제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맑스주의자들은 민주주의혁명의 과제를, 예컨대 볼셰비키 당의 ‘3대 기둥’ 강령 (봉건 지주제 철폐, 군주제 타도/민주공화제, 8시간 노동제)에서 보듯이 자본주의 토대는 건드리지 않는 반봉건 부르주아적 과제들로 한정했다. 반봉

건적 과제가 걸려 있는 조건에서 반자본주의적 과제, 사회주의 혁명 과제와는 구분하여 그 반봉건적 과제의 당면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봉건 지주제가 온존해 있던, 3대기둥 강령 당시의 러시아에서 사회주의혁명과는 구분되는, 반봉건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과제에 도전하는 “당면 민주주의혁명”을 내거는 것은 따라서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당면” 혁명으로 엄밀히 규정하는 것은 사회주의혁명과의 분리벽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중단 없는 연속혁명의 한 부분으로 - 제1 단계로, 즉 첫 단추로 - 자리매김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반봉건적 과제가 해소되었고 독점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현 단계 남한에서 “당면 민주주의혁명”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본주의 기초 자체를 겨냥한 중대한 투쟁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을 유리시키기 위한 것, 즉 사회주의노동자혁명을 차단하기 위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일 수가 없다. 현 단계 남한의 반민주악법·노동악법 철폐 과제는 반봉건적 과제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반민주악법·노동악법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혁명이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모든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들,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도 형태를 달리하며 존재한다. (잔학한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로 촉발된 현 미국 민중항쟁을 겨냥하여 트럼프 정부가 고물 창고 속에서 꺼내든 ‘

봉기진압법’을 보라. 그리고 미국의 경찰법 자체가 최악의 “반민주 악법”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면 민주주의혁명”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악법 철폐 과제를 위해 사회주의 혁명과는 별개의 혁명 단계를 설치하지는 것은 사실상 혁명에 반대하는 것, 예를 들어 촛불항쟁으로 그쳐야 하며, 그것을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잡는 혁명으로 확대·강화시키는 것에는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당면 민주주의혁명”이 아니라 이러한 악법 철폐를 위한 민주주의투쟁은 현 단계 남한에서도 가능하고 필요하다.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 후퇴’에 반대하는, 민주적 제 권리 침해에 대항하는 민주주의투쟁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촛불 정권” 하에서도 민주주의투쟁은 가능하고 필요하다.) 그리고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는 악법 철폐 같은 민주주의 요구를 개량주의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혁명적 방식으로 관철하며, 이러한 비타협적인 일관된 민주주의투쟁을 계급협조주의·기회주의와의 투쟁과 긴밀히 결합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적 민주주의투쟁과, 악법 철폐 과제를 위해 “당면 민주주의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혁명과 분리되는 별개의 단계를 설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후자에서는 악법 철폐 과제에 먼저 도전하고 그런 다음에야 반자본주의적인 과제, 사회주의혁명 과제에 도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동시에 도전하면 “좌

익 기회주의”이므로!) 이 같은 “당면 민주주의혁명”은, 거기에 아무리 “사회주의를 지향목표로 하는”이라는 문구를 수백 번 갖다 붙인다 해도 결국은 악법 철폐와 같은 민주주의 요구 투쟁을 사회주의혁명으로 확대·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 투쟁과제를 개량주의적 방식으로가 아니라 혁명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혁명’일 것이다. 즉 촛불 민주항쟁의 성과물을 자유주의 부르주아에게 헌납한 이른바 ‘촛불 혁명’과 같은, 그러한 류의 ‘혁명’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면 민주주의 혁명”은, “식민지적 자본주의”가 아닌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인 현 단계 남한에서는 사회주의혁명으로의 확대·강화를 차단하는 민주주의 반혁명일 것이다. (“지대추구적 천민자본주의를 해체하는” 경제민주화 요구, ‘건강한 자주적 자본주의’ 요구는 경실련 등에게나 쥐버려라!)

한편 “파쇼적”이지는 않은 자본가 정부인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투쟁은 어떤가? “지대추구적 천민자본주의”의 이해보다는 고도로 발달한 독점자본주의의 이해를 대표하는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투쟁 말이다. “혁명”과 “현 정세”를 말하면서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입장 글 전체를 통해 단 한 마디 언급도 없다. 민주주의혁명 단계이므로 혁명으로 “파쇼

적 정치체제”만 해체해야지 촛불 민주정부는 혁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가? “당면 민주주의혁명” 단계를 엄폐물로 내세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가리려한다.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와는 달리 “혁명”을 내걸지만 그러면서도 혁명의 근본 문제인 국가권력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자·민중은 이 역사적 시기에 사회주의를 지향목표로 하는 민주주의 혁명으로 펼쳐나서야 한다. 그 민주주의 혁명은 부르주아계급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소시민이 주도하는 민중혁명이며, 대외적으로 민족자주적이고 대내적으로 사회진보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급진적이다”²⁹⁾

“혁명”을 말하고 “노동계급과 소시민이 주도하는 민중혁명”이며 “급진적”인 혁명이라고 외치지만, 그럼에도 “중간 단계를 건너뛰는”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에는 반대해야 하니 권력 문제에선 모호한 채로 머물 수밖에 없다.

한 계급의 수중에서 다른 계급의 수중으로 권력이 이전한다는 의미에서의 혁명은, 현 단계 남한 사회에서는 오직 사회주의혁명 밖에 없다. 따라서 현 단계 남한에서의 노동자권력/사

29) <현 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http://dli.nodong.net/gnu5/bbs/board.php?bo_table=webzine&wr_id=763&sca=%EC%84%B8%EA%B3%84%EC%A0%95%EC%84%B8\(%EA%B2%BD%EC%A0%9C\)](http://dli.nodong.net/gnu5/bbs/board.php?bo_table=webzine&wr_id=763&sca=%EC%84%B8%EA%B3%84%EC%A0%95%EC%84%B8(%EA%B2%BD%EC%A0%9C))

회주의혁명에 반대하는 “민중 주도 급진적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수립되는 권력은 부르주아 권력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현 정세...>가 내거는 “혁명”은 멘세비키 단계론적 혁명이다. 즉 “혁명적 강령의 실행을, 소부르주아자에게 ‘더 적합하고’ ‘더 대중적이며’ 더 받아들이기 쉬운 목표점에서부터 시작하길 원”³⁰⁾하고 있다. 일단 이 “민중 주도 급진적 민주주의” 강령이 받아들여지면, 이 강령은 자동으로 다음 단계, 즉 사회주의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이러한 논리가 틀렸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아무리 “급진적”임을 자임하더라도, 아무리 스스로 “민중 주도” 권력을 자임하고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를 자임하더라도 그것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주의 정권 같은, 사회주의혁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노동자권력/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반대하여 사회주의혁명을 차단하는 부르주아 보나파르트주의 정권 이상이 아닐 것이다. (물론 지금도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주의 정권이 “사회주의를 지향 목표로 하는” 정권이라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지만 말이다.)

<현 정세...>는 시효가 지난 민족·민주 강령을 가지고 “한국 노동자·민중의 당면한 역사적 과제”에 도전하자고 한다.

30) 레닌 <유니우스 팸플릿에 대하여>,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33쪽

선진 계급에게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눈을 돌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 유럽에서 1793년과 1848년에 *객관적으로* 일정에 올라 있었던 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혁명이었다. 이러한 객관적인 역사적 상황에 조응했던 것은 그 당시 존재했던 민주주의의 “진정으로 민족적인”, 즉 민족 *부르주아적인* 강령이었다. 1793년에 이 강령은 부르주아지와 평민의 가장 혁명적인 분자들에 의해 수행되었고, 1848년에는 이 강령이 마르크스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 전체의 이름으로 선언되었다. *객관적으로*, 당시 봉건적·왕조적 전쟁들에 대항하여 혁명적 민주주의 전쟁들, 민족해방 전쟁들이 수행되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역사적 과제의 내용이었다.

현재 유럽의 가장 큰 선진국들의 객관적 상황은 다르다. 우리가 일시적인 후퇴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진보는 오직 *사회주의*의 사회를 향해서만, *사회주의혁명*을 향해서만 가능하다.”³¹⁾

“당면 *민주주의혁명*”을 내세워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에 반대하면서도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와는 달리 개량주의와 의회주의에 반대하고 “혁명”을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세...>는 자민통 노선에 좌익적 외피를 씌어주는 중도주의 역할을 하

31) 같은 글 28쪽

고 있다. 중도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지향 목표로 하는” 운운하지만, 그러한 “악법 철폐!” 등 민주주의 요구들 이상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 이 민주주의 요구들을 프롤레타리아혁명 목표와 결합시키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도주의자들은 이러한 요구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민주주의혁명 단계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계급투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을 부르주아지에게 정치적으로 종속시킨다.

중도주의자와는 달리, 사회주의 노동운동은 민주적 권리의, 일관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가장 확고한 주창자여야 하며, 이러한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투쟁을 노동자계급·피억압자의 무장봉기를 통한 사회주의혁명의 전략적 과제와 결합시켜야 한다. 민족해방 과제가 걸린 식민지 조건에서도 민족자결과 독립 등 “기본적인 민주주의 요구를 위한 투쟁을 사회주의혁명으로까지 확대·강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레닌의 다음과 같은 선언을 보라.

“모든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제출된 식민지의 즉각적인 해방 요구 또한 일련의 혁명 없이는 자본주의 하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사회민주주의가 이 모든 요구를 위한 즉각적이고 가장 단호한 투쟁을 거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한

거부는 부르주아지와 반동을 이롭게 해줄 뿐이다). 반대로, 그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이러한 요구들이 개량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혁명적 방식으로 정식화되고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르주아 합법성의 경계를 넘어 나아가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의회 연설과 구두 항의를 넘어 대중을 결정적인 행동으로 끌어들이며, 모든 기본적인 민주주의 요구를 위한 투쟁을 부르주아지에 대한 직접적인 프롤레타리아적 공격으로까지, 즉 부르주아지를 수탈하는 사회주의혁명으로까지 확대·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혁명은 어떤 대규모 파업이나 거리 시위나 기아 폭동이나 군사 반란이나 식민지 반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드레퓌스 사건이나 차베른 사태 같은 정치적 위기의 결과로도, 또는 피억압 민족의 분리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 등과 연계해서도 터져 나올 수 있다.”³²⁾

〈현 정세...〉가 말하는 악법 철폐를 비롯한 “민중 주도 민주주의” 과제들, “급진적 민주주의” 과제들은 자본주의하에서는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 즉 여전히 자본가계급의 수중에 권력이 그대로 있는 “당면 민주주의혁명”을 수십, 수백 번 한다 해도 실현될 수 없다. 오직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지배를 확립하는 사회주의혁명을 통해서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요구들을 위한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

32) 레닌 〈사회주의혁명과 민족자결권 (테제)〉, 편집부 엮음 〈맑스-레닌주의 민족운동론〉, 버리, 159쪽. (강조 밑줄은 인용자)

급이 이끌어야 한다. 민주주의 대중운동이 부르주아 또는 소 부르주아 세력에 의해 이끌릴 때 사회주의자들은 그 운동 내부에서 싸워야 하며 노동자계급이 독립적인 세력으로 행동하도록 싸워야 한다. 이와 같이 노동자계급의 독립을,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을 준비하기 위해 대중 투쟁기관 (행동평의회, 정당방위대, 소비에트 등등) 구성을 내걸고 그 필요성을 대중 속에서 끈질기게 설명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주의자들은 당면 요구/민주주의 요구 투쟁을, △은행·대기업 몰수 △노동자의 무장 △노동자정부 등과 같은 주요 이행강령 슬로건에 대한 체계적인 선전과 항상 결합시켜야 한다.

[자료]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남한

한국 독점자본의 성격과
그에 따른 노동자 전위의 강령적 임무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19년 12월

〈차례〉

I. 몇 가지 일반적 고려 사항

1. 문제의 현실 유의미성
2. 정의: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구성요건은 무엇인가?

II. 남한 독점자본에 대한 개괄

3. 역사적 배경: 급속한 공업화를 가능케 한 이례적인 조건들
4. 고도로 산업화한 현대 자본주의국으로서의 한국
5. 한국 독점자본: 국내시장의 지배
6. 한국 독점자본: 세계시장에서의 글로벌 플레이어
7. 한국 독점자본: 자본수출의 역할

III. 남한의 제국주의로의 전화에서 비롯하는 몇 가지 정치적 문제들에 대하여

8. 노동귀족층의 대두와 한국 노동자계급 내 불평등
9. 남한 제국주의의 정치적 역할과 그 제한적인 독자성

IV. 몇몇 반론에 대하여

10. 남한이 여전히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지라는 스탈린주의적 신화
11. 아(亞)제국주의론의 오류

V. 반제국주의 강령과 혁명적 전술

12.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
13. 오늘 남한에서 반제국주의적 임무

보론: 역사적 유추 - 1891년과 1914년 독일에서 맑스주의적 전술

I. 몇 가지 일반적 고려 사항

이하의 글은 필자의 독자적인 조사연구의 결과물이자 동시에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RCIT) 남한 동지들과의 집중 토론 및 협력의 결과물이다. 특히 필자는 이미 제국주의 문제에 관한 두 글을 낸 홍수천 동지에게 감사를 표한다.¹⁾

1. 문제의 현실 유의미성

남한이 반(半)식민지에서 2000년대에 제국주의로 전화한 것은 맑스주의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다. 남한의 혁명가들에게만 이 아니라 전체 아시아 대륙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세계경제에서 한국이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었다. 삼

1) 홍수천: 한반도 전쟁 위기와 미·중 제국주의 패권 쟁투 (Hong Su-Cheon: W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ivalry between US and Chinese Imperialism, Article in Korean language, Spring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risis-on-korean-peninsula-us-and-chinese-imperialism/>; 홍수천: 현 시기 격화하고 있는 제국주의 패권쟁투와 사회주의자의 임무 (Hong Su-Cheon: The Acceleration of the Great Power Rivalry in the Present Period and the Task of Socialists in Korea, Article in Korean language, March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struggle-for-imperialist-hegemony-socialism/>

성, 현대, LG 같은 한국의 주요 독점체들은 글로벌 엘리트 기업 군(群)에서 두드러진 멤버들이다.

둘째, 한국의 부상은 라이벌 일본과의 대결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한판 붙어보겠다는 의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한 결과들 - 무역전쟁 개시부터 군사협력 협정 파기 (지소미아 종료)에 이르기까지 - 은 동아시아의 지리적 전략 환경과 이 지역의 미 동맹체제에 큰 파장을 미친다.

셋째, 남한의 변화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오랫동안 북한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침략·도발을 고려할 때 세계정치에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반도는 거의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 -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 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지역이다.

그 결과로, 이러한 변화는 혁명가들에게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른바 “민족해방(NL)” 조류 - 남한의 스탈린주의 · 준 스탈린주의 조직들 - 의 주장과는 반대로, 노동자 전위이자국의 “민족해방”을 위해 투쟁해야 할 전략적 임무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남한 혁명에서 민족해방 과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떤 “민족해방” 투쟁도 실제로는 남한 독점 부르주아지에 대한 사회제국주의적 지지로 되어버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남한이 반식민지에서 제국주의 국가로 전

화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국 자본주의의 질적 비약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1987년 6월 항쟁과 군사독재 퇴장 이후의 시기에 크게 고양된 노동자운동을 봉쇄하고 패퇴시키는 데 독점 부르주아지가 성공한 그 물질적 토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한국에서 노동귀족층, 즉 제국주의 초과이윤에서 지불된 프롤레타리아트의 특권적 상층의 형성, 이것이 바로 노동자운동의 개량화와 체제내화, 그리고 그 거대한 관료화의 물질적 토대를 이루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에서 부르주아지가 제국주의 자본가계급으로 전화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개량주의가 한국 노동자운동 내에서 거둔 (일시적) 승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모든 이유들로 인해 한 동안 RCIT는 한국이 반식민지에 서 제국주의 국가로 탈바꿈하는 것을 분석하면서 이 문제가 가지는 현실 유의미성을 지적해왔다. 우리는 이 연구가 한국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혁명적 투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²⁾

2) 제국주의 국가로서 남한을 분석한 우리의 글로는 위에서 언급한 홍수천의 두 글 이외에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Nature of South Korean Imperialism and the Tactical Consequences for Revolutionaries (Theses), 06,12,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nature-of-south-korean-imperialism-and-revolutionary-tactics-theses/> [국역: "남

이하의 연구는 RCIT 남한 동지들과의 토론을 위해 작성하여 얼마 전에 발표한 <테제>³⁾를 상세화한 것이다.

2. 정의: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구성요건은 무엇인가?

남한 제국주의의 특징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기 전에 먼저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정의를 간략히 개괄해보자. 우리가 다른 글

한 제국주의의 성격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전술”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nature-of-south-korean-imperialism-and-revolutionary-tactics-theses/>; Michael Pröbsting: The Korean Peninsula: Imperialist Aggression, Capitalist Restoration and Revolutionary Defenseism (Chapter VI, in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8/>; Michael Pröbsting: Capitalist Development in South Korea and Taiwan (199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apitalism-in-south-korea-taiwan/>; Down with the Imperialist Trade War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Down with all chauvinist boycott campaigns! Class War instead of Trade War! Joint Statement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s of South Korea and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endency (RCIT), 19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trade-war-between-japan-and-south-korea/> [“한·일 제국주의 무역전쟁 분쇄”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trade-war-between-japan-and-south-korea/>]; Korea: There Is No Peace Without Overthrowing Imperialism and the Rule of Capital! Peace through the Proletarian Socialist Revolution! Joint Statement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s of South Korea and the RCIT, 8 March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rcit/joint-statement-on-south-korean-imperialism/> [“한반도 : 제국주의와 자본의 지배를 타도하지 않고는 평화는 없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joint-statement-on-south-korean-imperialism/>].

3) Michael Pröbsting: The Nature of South Korean Imperialism and the Tactical Consequences for Revolutionaries (Theses), 06.12.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nature-of-south-korean-imperialism-and-revolutionary-tactics-theses/> [“남한 제국주의의 성격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전술”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nature-of-south-korean-imperialism-and-revolutionary-tactics-theses/>]

들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상세히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우리의 개념을 요약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⁴⁾

맑스주의자로서 우리의 출발점은 불세비즘의 창건자이자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인 레닌이 정립한 바의 고전적인 제국주의 정의다. 레닌은 제국주의의 본질적 특징을, 경제를 지배하는 독점의 형성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레닌은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으로의 융합, △상품수출과 함께 자본수출의 증가, △세력권, 특히 식민지 획득을 위한 투쟁을 지적했다.

레닌은 제국주의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이론적 글인 <제국

4) 우리는 다른 글들에서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을 폭넓게 다룬 바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Vienna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미하엘 프뢰브스팅 지음, 노동자혁명당(준) 옮김,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2020년, 노혁당];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5,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2013, <http://www.great-robbery-of-the-south.net/>; Imperialism and the Decline of Capitalism (2008), in: Richard Brenner, Michael Pröbsting, Keith Spencer: The Credit Crunch – A Marxist Analysis (2008),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and-globalization/> [“제국주의와 쇠퇴하는 자본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imperialism-and-decline-of-capitalism/>].

주의와 사회주의 내의 분열)에서 다음과 같은 제국주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가능한 한 정확하고 완전한 제국주의 정의(定意)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국주의란 자본주의의 특수한 역사적 단계이다. 그 특수성은 세 가지다. 제국주의는 (1) 독점 자본주의, (2) 기생적인, 또는 부패해가는 자본주의, (3) 사멸해가는 자본주의다. 독점이 자유경쟁을 대체했다는 것이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경제적 특징이고 그 본질이다. 독점은 주되게 다섯 가지 형태를 취하며 나타난다. (1) 카르텔 · 신디케이트 · 트러스트 — 이러한 독점적 자본가 집단을 낳을 정도로 생산의 집적이 이루어졌다. (2) 대 은행들의 독점적 지위 — 서넛 내지 다섯 개의 거대 은행이 미국, 프랑스, 독일의 경제생활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3) 트러스트와 금융과두제(금융자본은 은행자본과 융합한 독점적 산업자본이다)가 원료자원을 장악하고 있다. (4) 국제적 카르텔에 의한 세계의 (경제적) 분할이 시작되었다. 그러한 국제적 카르텔은 이미 백 개도 넘는 데, 이들이 세계시장 전체를 지배하며, 이 세계시장을 ‘사이 좋게’ 분할하고 — 전쟁이 그것을 재분할할 때까지는 ‘사이 좋게’ — 있다. 비독점 자본주의하에서의 상품 수출과 구별되는, 매우 특징적인 현상으로서의 자본 수출은 세계의 경제적 및 영토적 · 정치적 분할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5) 세

계의 영토적 분할(식민지)이 완료되었다.”⁵⁾

여기서 보듯이, 레닌은 독점의 형성이 제국주의 시대에 경제의 본질을 구성한다는 것을 한 점 모호함 없이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점은 위 인용문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레닌의 다른 수많은 진술로부터도 분명하다. 또 하나의 같은 시기 글에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경제적으로 제국주의(또는 금융자본 ‘시대’ – 말의 문제는 아니다)는 자본주의 발전의 최고 단계이며, *자유경쟁이 독점에 자리를 내줄* 정도로 생산이 거대한 규모를 띠는 단계다. 이것이 제국주의의 경제적 본질이다. 독점은 *트러스트, 신디케이트* 등등으로, *거대 은행의 전능한 힘으로, 원료자원의 매점* 등등으로, *은행자본의 집중* 등등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독점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다.”⁶⁾

그리고 그의 유명한 책 <<제국주의론>>에서는 다시 이렇게 강조했다. “경제면에서 보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본

5) V. I. Lenin: Imperialism and the Split in Socialism (1916); in: CW Vol. 23, pp. 105–106 (이탈릭체 강조는 원저자).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내의 분열,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295–6쪽, 양효식 옮김, 아고라, 2018].

6) V. I. Lenin: A Caricature of Marxism and Imperialist Economism; in: LCW Vol. 23, p. 34.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170쪽].

주의적 독점이 자본주의적 자유경쟁을 대체한다는 것이다.”⁷⁾

요컨대, 레닌은 *독점 자본주의* – 독점의 형성과 경제에 대한 독점체들의 지배, 열강의 세계정치 지배와 그에 따른 노동자계급 및 타 민족에 대한 억압·착취 – 가 제국주의의 본질임을 강조했다.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정의는 변증법적 파악이므로 일국을 *고립시켜* 보아서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이해할 수 없다. 맑스주의의 방법론적 기초는 우리에게 각각의 사물, 각각의 현상을 *고립시켜서*가 아니라 *다른 사물, 다른 현상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스탈린주의적 탄압 이전인 1920년대 소련에서 대표적인 맑스주의 철학자 아브람 데보린은 이 문제를 이렇게 정식화했다. “세계에서 어떤 사물도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물은 전체의 나머지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⁸⁾

따라서 국가의 경우에도, 주어진 한 국가는 별개의 단위로서

7) V. 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1916) ; in: LCW Vol. 22, p. 265.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레닌전집 63권, 143쪽, 이정인 역, 아고라, 2017]

8) Abram Deborin: *Lenin als revolutionärer Dialektiker* (1925); in: Nikolai Bucharin/Abram Deborin: *Kontroversen über dialektischen und mechanistischen Materialismus*, Frankfurt a.M. 1974, p. 136 [영역은 필자].

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그 국가가 다른 국가·민족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한다. 국가란 정의상 복수의 국가들로 존재하기 때문에 홀로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은 자명하다. 계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계급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노동자계급 없는 부르주아지란 없다. 농업 노동자와 농민이 없는 대지주란 없다. 같은 식으로 식민지·반식민지가 없는 제국주의 국가란 없다. 그리고 단 하나의 강대국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복수의 강대국들이 존재한다.

나아가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맑스주의 변증법적 이해는, 그 대상 [제국주의 국가]의 “많은 규정과 관계의 풍부한 총체”⁹⁾ 속에서 그 대상을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제국주의 열강을 도식적인 방식으로 보아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하나의 모델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널리 퍼진 오류가 존재한다. 즉 제국주의 국가는 미국 혼자이고, 제국주의 국가의 모델은 미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글들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이러한 접근법은 사회 일반의, 특수하게는 제국주의 국가의 발전에서의 불균등성을 완전히 무시한다.¹⁰⁾ 이 같은 무시는 중대한

9) Karl Marx: Economic Manuscripts of 1857-1858, in: MECW 28, p. 37

10) 불균등성이 자본주의 자체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맑스가 이미 밝혔다. “자본주의적 생

오류를 낳는데, 왜냐하면 레닌이 강조했듯이 “경제적 · 정치적 발전의 불균등성은 자본주의의 절대적 법칙이기”¹¹⁾ 때문이다.

따라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발전은 한결 같지 않고 오히려 각각의 경우마다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실제로도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경제적 수준에서 보다 군사적 수준에서 훨씬 더 강력한 강대국이다. 일본과 독일에서는 정반대의 경우가 사실이다. 게다가 보다 큰 제국주의 국가와 보다 작은 제국주의 국가가 존재하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미 · 중에서부터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까지).

이 같은 불균등성은 자연히, 미 · 중처럼 가장 지배적인 제국주의 국가가 아닌 그 이외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우에 타 강대국 (말하자면 미국이나 중국)과의 동맹관계 – 그들이 타 강대국에 타협,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지어는 일정 정도 스스로를 타 강대국에 종속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동맹

산은 특정 영역, 특정 조건에서만 스스로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만약 자본주의적 생산이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균등하게 발전해야 한다면 자본주의적 생산 같은 것은 전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Karl Marx: Theories of Surplus-Value, Part 2, MECW 32, p. 161), 명백히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경제적 토대와 정치적 상부구조 영역에서의 자본주의적 재생산에 대해서도 진실이다.

11) V. I. Lenin: On the Slogan for a United States of Europe (1915); in: CW Vol. 21, pp. 341-342. [레닌 <유럽합중국 슬로건에 대하여>,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106쪽, 양효식 역, 아고라, 2017].

관계 - 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가져온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일본·서독의 발전과 그에 따른 그들의 제국주의에의 종속이 그 생생한 예다.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의 보다 작은 제국주의 국가들은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의 선도적 열강에 일정 정도 종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호주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다소 간에 종속적인 지위를 점한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또 다른 예다.

그러므로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을, 그들 발전의 이 측면 또는 저 측면만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그 총체성에서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해당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잘못 판단하고 그 결과, 정치적 혼동 속에서 계급투쟁 바리케이드의 올바른 쪽을 취하는 데 실패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끝으로, 운동을 본질적인 것으로 -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아니더라도 - 인식하는 것은 변증법의 기본 요건이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그의 유명한 <<반뒤링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운동은 물질의 존재 양식이다. 운동 없는 물질은 결코 어

디서도 존재해 본 적이 없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 우주 공간에서의 운동, 각각의 전체에서의 미소한 물체의 역학적 운동, 열 또는 전류나 자력으로서의 분자운동, 화학적 분해 및 화합, 유기적 생명 등등의 세계의 이 모든 물질원자는 어느 순간에나 이상과 같은 운동형태 중의 어느 하나 또는 동시에 여러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모든 정지나 모든 평형상태는 오직 상대적이고 일정한 운동형태와의 관계에서만 비로소 의의가 있는 것이다... 물질 없는 운동과 마찬가지로 운동 없는 물질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운동은 물질 자체와 마찬가지로 창조될 수도 없고 파괴될 수도 없는 것이다.”¹²⁾

이와는 다를 수가 없는 이유는 모든 물질 - 자연에서와 사회에서의 - 은 외적 모순뿐만 아니라 내적 모순에 의해 특징지어지기 때문이다. 물질은 모순들의 통일이며, 이 모순들의 발전은 물질의 운동 동력이다. 레닌이 강조했듯이, “대립물의 통일(일치, 일체성, 동일한 작용)은 조건적, 일시적, 과도기적, 상대적이다. 상호배제적인 대립물의 투쟁은 발전과 운동이 절대적인 것처럼 절대적이다.”¹³⁾

이 외견상 순 추상적인 문제는 국가들의 계급적 성격 분석에

12) Friedrich Engels: Anti-Dühring, Herr Eugen Dühring's Revolution in Science, in: MECW Vol. 25, pp. 55-56 [프리드리히 엥겔스 《반뉘링론》, 김민석 역, 새길, 69쪽]

13) V.I. Lenin: On the Question of Dialectics (1915); in: CW 38, p.358

고도로 적실성을 갖는다. 스탈린주의적 사유는 근본적으로 기계론적이며 변증법적 사고방식을 결여하고 있다. A는 A이고 A로 남는다, 끝! 모순과 변화 속에서 사고하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은 모순 및 그 모순으로 인한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의 운동을 인정한다. 맑스주의자들은 “현실 자체의 리듬과 운동을 반영하는”¹⁴⁾ 변증법의 방법에 분석의 기초를 둔다.

오직 이러한 변증법적 접근만이 맑스주의자들로 하여금 계급들 간, 국가들 간 관계망의 발전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오직 이러한 변증법적 접근을 통해서만 맑스주의자들은 이 관계에서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고, 따라서 해당 국가의 가능한 계급적 성격 전화를 고려에 넣을 수 있다. 그 자체가 양질 변화 과정의 결과인 이러한 전화는 인류 역사에서 반복해서 일어났다. 7세기와 8세기에 비잔틴 제국이 고대 노예소유주 국가에서 봉건 국가로 전화한 것은 인류 역사의 수많은 예들 중 하나일 따름이다. 보다 최근의 예를 든다면, 러시아를 비롯한 그 밖의 나라들에서 스탈린주의의 붕괴가 자본주의의 복고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 1970년대에 포르투갈 식민 제국의 붕괴

14) Abram Deborin; 다음에서 인용: Rene Ahlberg: ‚Dialektische Philosophie‘ und Gesellschaft in der Sowjetunion, Berlin 1960, p. 29

가 포르투갈이 제국주의 나라에서 반식민지 나라로 전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 또는 보다 최근의 예로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요컨대, 모순과 운동 속에서 사고할 능력이 없다면, 계급 사회에서 일어나는 바와 같은 발전을 인식하지 못한다.

제국주의 국가의 특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다음과 같은 짧은 정의로 일단 정식화하고 넘어가자. 제국주의 국가란 무엇보다도 그들의 독점체와 국가기구가 세계질서 속에서 타 국가 · 민족을 지배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다. 그 결과, 제국주의 국가는 그러한 초과착취와 억압에 기초한 관계로부터 초과이윤을 비롯한 그 밖의 경제적 · 정치적 · 군사적 이득을 얻는다.

II. 남한 독점자본에 대한 개괄

3. 역사적 배경: 급속한 공업화를 가능케 한 이례적인 조건들

한국의 제국주의 국가로의 전화는 이례적인 발전의 경우인데,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서유럽 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20세기 내내 이들 국가와는 다른 계급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20세기 전체에 걸쳐 한국은 식민지(1945년까지) · 반(半)식민지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반식민지로의 발전의 특수한 특징들이 남한 독점자본의 형성과 그에 따른 제국주의 국가로의 전화를 가능케 해준 중요한 요인들이 되었다.

우리는 1996년에 이른바 "아시아 호랑이들", 특히 2차 세계 대전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을 분석한 광범위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특수한 조건들이 국내 시장을 지배하고 자본을 수출하기 시작한 독점자본 형성으로 귀착된 과정을 보여주었다.¹⁵⁾

15) Michael Pröbsting: Der kapitalistische Aufholprozesses in Südkorea und Taiwan – Bilanz und Analyse, in: Journal „Revolutionärer Marxismus“ Nr.20 (199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kapitalismus-in-suedkorea-taiwan/>; 상당 분량이 축약된 영어 요약본도 있다. Capitalist Development in South Korea and Taiwan, originally published in Trotskyist International No.21, Theoretical Journal of the League for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199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apitalism-in-south-ko->

여기서는 이 연구 결과를 짧게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넘어갈 것이다. 남한은 제국주의 국가들과 스탈린주의 진영 간의 글로벌 대결 - 처음에는 1950-53년의 파멸적인 한국전쟁에서, 그리고 그 뒤의 냉전에서 - 에서 언제나 "최전방국가"였다. 이로 인해 사실상 미국이 남한을 점령하고 남한의 정치적·경제적 발전에 대한 통제권을 쥐는 것으로 결과하였다. 이 냉전의 특수한 조건들이 미 제국주의로 하여금 남한의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정책에는 40% 정도 토지의 재분배를 가져온 실질적인 농지개혁도 포함되었다. 그리하여 이 농지개혁으로 인해, 자기 토지를 소유한 농민 수가 50%에서 94%로 늘어났다.¹⁶⁾ 이것으로 광범위한 자영농 계급이 창출되면서 부르주아 보나파르트주의 체제의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

1987년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남한은 군사독재가 지배했다. 이러한 억압적 국가기구가 노동자계급에 대한 잔혹한 초과착취를 위한 조건을 담보해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꼭두각시 독

[rea-taiwan/](#)

16) Aadne Cappelen, Jan Fagerberg: East Asian Growth: A Critical Assessment; in: Forum for Development Studies 2/1995, p. 192

재정권들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재정적·경제적 지원 흐름이 상시적으로 존재했다. 예를 들어 1945년에서 1978년까지 미국은 6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원조를 독재정권들에게 쏟아 부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대한 경제원조와 맞먹는 액수다!

이 모든 요인들을 통해 급속한 자본축적 과정을 위한 조건이 확보되었다. 표1에서 보듯이 40년 동안의 급속한 고정자본 스톡 증가율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을 현격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표 1: 자본축적: 고정자본 스톡 증가율, 1960-2000년 (%) ¹⁷⁾

	발달한 공업국들	남한	중국	인도	브라질
1960년대	+5.0%	+8.9%	+1.9%	+4.5%	+5.8%
1970년대	+4.2%	+14.6%	+7.2%	+4.1%	+9.6%
1980년대	+3.1%	+11.2%	+8.4%	+4.9%	+4.1%
1990년대	+3.3%	+9.6%	+10.9%	+6.2%	+2.2%

나아가 경제발전에 국가가 개입하여 재벌로 알려진 막강한 대기업집단의 형성을 장려하였다. 재벌이라는 말은 부를 뜻하는 한국말 재(財)와 씨족을 뜻하는 벌(閥)을 조합한 말이다. 이러한 국가 주도 자본집적 과정은 세계시장을 겨냥한 현대적 산

업의 창출을 도왔다.

그 과정에서 이들 재벌은 점점 더 국민경제 내에서 절대적 패권을 행사하는 강력한 독점자본으로 발전하였으며, 정치적으로도 부르주아 정권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1974년에는 10대 재벌의 생산 총액이 GNP의 15.1%만을 점했던 데 비해 1983년에 이르러서는 그 비중이 이미 65.2%로 급증했다.¹⁸⁾ 재벌들이 자본을 수출하기 시작했고 1992년에 한국은 순 자본 수출국이 되었다.

그리하여, 1996년에 발표한 이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과 대만은 제국주의 국가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우리는 대만의 경우에는 아니라고 이 질문에 대답하며, 대만을 “선진 반식민지 (advanced semi-colony)”라고 성격규정 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당시에 우리는 이렇게 썼다.

“한국은 이미 한 걸음 앞서 있다 (대만과 비교할 때). 우리가 실제로 보여주었듯이, 고도의 독점화가 세계시장에서 상

18) Hooshang Amirahmadi: Development Paradigms at a Crossroad and the South Korean Experience, in: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19, Issue 2 (1989), p. 179

대적으로 강력한 지위를 한국에 허락해주고 있다. 우리는 한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이행 중에 있는 매우 선진적인 반식민지로 성격 규정한다. 왜 한국은 아직 제국주의가 아닌가? 자본수출이 상대적으로 늦게 본질적인 특징이 되었고 그 규모도 여전히 크지 않아서다. 우리는 재벌들이 두 가지 본질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다음 몇 년 안에 판가름날 것으로 본다. 첫째, 대규모 부채를 줄일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둘째, 다음 몇 년 안에 글로벌 침체가 있을 것이다... 재벌들이 이러한 압력을 버텨내는 데 성공할지,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이다. 이것이 한국이 제국주의 국가가 될지, 아니면 선진적이지만 종속적인 반식민지로 다시 빠져들지를 결정할 것이다.”¹⁹⁾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은 - 그리고 지역 전체도 - 1997/98년에 이른바 아시아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의 독점자본은 이 위기에 뒤이은 과정에서 구조재편과 공고화에 성공했다.

요약하면, 냉전 최전방 국가로서의 남한의 성격에서 비롯한 일련의 요인들이 어우러져 내국 독점자본의 형성에 이례적

19) Michael Pröbsting: Der kapitalistische Aufholprozesses in Südkorea und Taiwan - Bilanz und Analyse. [영역은 필자]

으로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 이어진 친미 군사독재 정권들의 존재로서, 이것이 노동자계급에 대한 엄청난 초과착취와 실질적인 농지개혁,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의 대대적인 정치적 지지와 재정·경제 원조, 국가자본주의적 조절·규제 등을 보장하는 담보물이 되었다. 2000년대에 와서 마침내 한국은 제국주의 국가로 부상했다.

4. 고도로 산업화한 현대 자본주의국으로서의 한국

한국이 성장하여 고도로 산업화한 현대 자본주의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몇 가지 발전 요인들의 조합 때문이었다. 많은 지표들이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인구 5100만의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같은 선도 국가들에 뒤이어 세계 상위 경제권 국가가 되었다. 오늘, 한국 경제는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네 번째로 크고 전 세계적으로는 열두 번째로 크다.²⁰⁾ 한국의 1인당 GDP는 이미 스페

20)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19 September 2019, p. 1,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

인보다 높다.²¹⁾ 한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1인당 국민소득이 1970년 OECD 평균의 6%에서 2017년 89%로 증가한 사실로도 나타난다.²²⁾

부문별 한국 경제의 구성은 서유럽 나라들의 구성과 유사하다. 농업 비중(2.2%)은 스페인(2.8%)보다 작다. 한국의 대규모 공업화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서유럽과 미국 등 대부분의 기존 제국주의 나라들의 탈공업화)를 고려할 때, 국민총생산에서 공업 비중(38.6%)은 일본(28%)보다 높고 – 서유럽과 미국 같은 기생적인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 오직 중국(40.0%)만이 대적된다. (표 2 참조)

표 2. 한국의 경제활동 종류별 부가가치, 2016년²³⁾

농업	공업	서비스업
2.2%	38.6%	59.2%

한국에서 노동인력 고용 상황을 보더라도 비슷한 그림이 보인다. 농업에 고용된 노동인력 비율은 지난 수십 년간 급격히 감소해 현재는 4.8%에 불과하다. (표 3 참조). 이 비율은 스페인(4.1%)이나 오스트리아(4.2%)와 같은 제국주의 나라들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다.

표 3. 한국의 경제활동별 고용, 2018년 ²⁴⁾

농업	공업	서비스업
4.8%	24.6%	70.6%

한국 독점체들의 강력한 지위를 반영하듯 한국은 상품무역에서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다. 세계 상품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3.1%)은 이미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보다 크다. 유럽연합(EU) 내 교역을 제외한다면 한국은 이미 중국, 미국, EU, 일본에 이어 5위다. ²⁵⁾

한국의 수출은 GDP의 약 절반을 점하며 선박, 자동차, 정유,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 기계, 휴대폰과 같은 제조업 및 하이테크 부문의 고부가가치 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표 4 참조)

표 4. 한국의 최상위 수출 품목들, 2017년²⁶⁾

	품목별 총 상품수출액 비율
--	----------------

24) United Nations: Statistical Yearbook, 2018 editio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New York 2018, p. 212

25) World Trade Organization: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19, pp. 100–101

26) OECD Economic Surveys: Korea (Overview), 2018, p. 13

반도체	17.1
선박	7.4
자동차	7.3
석유제품	6.1
평면 디스플레이 및 센서	4.8
자동차 부품	4.0
무선 통신장비	3.9
합성수지	3.6
평면압연철강 제품	3.2
컴퓨터	1.6

한국 현대화의 또 다른 지표는 인터넷 사용 인구의 높은 비율이다. 유엔의 최근 수치에 따르면, 2019년까지 전체 개인 95.1%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이는 일본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²⁷⁾

이러한 수치들 그 자체로는 한국이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들을 참조할 것), 이미 그 수치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대대적인 따라잡기 과정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를 이룬다.

27) United Nations: World Statistics Pocketbook 2019 editio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New York 2019, p. 201 resp. 140; see also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7, p. 84

5. 한국 독점자본: 국내시장의 지배

위에서 말했듯이, 독점자본의 형성이 제국주의의 본질적인 특징 –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닐지라도 – 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한줌의 독점체들 – 이른바 재벌 – 의 지배로 특징지어진다. 이들 독점기업은 다양한 업종에 걸쳐 수많은 자회사 (“계열사”)를 거느린 가족 소유 기업이다.

다음 수치는 재벌이 한국 경제에서 점하고 있는 관제고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재벌의 전통적인 정의에 맞는 45개의 대기업집단이 있다. 상위 10대 재벌이 국내 전체 사업자산의 27%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재벌은 LG, 현대, SK, 롯데, 삼성이다. 이들 5대 재벌이 한국 주식시장 가치의 54%를 차지한다.²⁸⁾

경제개혁연구소가 낸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그 동태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28) Peter Pae: South Korea's Chaebol, 29, August 2019, <https://www.bloomberg.com/quicktake/republic-samsung>

GDP 대비 30대 그룹 자산 비율은 100.3%로 나타났다.²⁹⁾ 한국 최대 재벌 삼성의 자산만 해도 GDP의 42%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른 연구도 나왔다.³⁰⁾ 또 다른 연구는 삼성그룹의 매출액이 한국 GDP의 약 20%에 달한다고 주장한다.³¹⁾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 평가 웹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한국의 10대 기업들이 2017년에 도합 6778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한국 GDP의 44.2%에 해당한다. 주도적 독점기업들의 비중이 다른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보다 더 크다. 예를 들어, 같은 기간 일본에서는 최상위 기업들이 GDP의 24.6%를 점했고, 미국에서는 이 비율이 11.8%였다.³²⁾

한국 최대 재벌 그룹들의 지배적 지위를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수치를 보자. <2018년 OECD 한국 경제조사>에 따르면 상위 30대 그룹에서 4대 그룹의 비중이 2011년에서 2017년

29) Michael Herh: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on 30 Largest Chaebols Eases for 4th Consecutive Year, February 19, 2018,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8>

30) Rachel Premack: South Korea's Conglomerates, SAGE Publishing Business Researcher, August 21, 2017, p. 4

31) Robyn Klingler-Vidra and Ramon Pacheco Pardo: Beyond the Chaebol? The Social Purpose of Entrepreneurship Promotion in South Korea, in: Asian Studies Review, 43:4 (2019), p. 651

32) Park Joon-hyung and Cho Jeehyun: Top 10 Korean Inc, revenue equivalent to nearly half of GDP, 6 September 2018, <https://pulseneews.co.kr/view.php?year=2018&no=562268>

사이에 더 커졌다. 2017년에 오면 30대 그룹에서 삼성, 현대, SK, LG 4대 그룹이 자산 52.7%(+3.6%), 이윤 69.4%(+7.1%)를 점한다.³³⁾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장 중요한 5대 재벌이 삼성, 현대, SK 그룹, LG, 롯데다. 무선통신 및 반도체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인 삼성은, <<포브스>>지에 따르면 세계 12대 기업이다. 삼성 그룹 최대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 걸쳐 32만 명 이상(애플 12만 3천명, 구글 8만 8천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을 고용하고 있다. 한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삼성은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세계 3위의 자동차 제조업체이며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의 조선회사가 되었다. SK그룹도 다양한 사업 부문이 있는데 그 중 SK하이닉스는 세계 2위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다.³⁴⁾

이미 언급했듯이, 재벌 기업은 재벌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각 재벌은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회사들의 방대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지만,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를 통해 한 가족의 단

33) 2018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Achieving a new paradigm for inclusive growth, Sejong, 20 June 2018, p. 16

34) Eleanor Albert: South Korea's Chaebol Challeng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y 4, 2018, <https://www.cfr.org/background/south-koreas-chaebol-challenge>

일 공동 경영·재무 관리 하에 통합되어 있다. 보통 한 사람의 총 회장 (재벌 총수)이 있는데 이 총수가 그룹 전체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³⁵⁾

예를 들어 삼성은 이 회장 일가의 지배를 받는다. 공식적으로는, 이 회장 일가의 소유는 전체 그룹 주식의 1.67%에 불과하다. 그러나 상호출자 방식으로 지배적 지위를 보장 받는다.³⁶⁾ 다른 재벌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35대 그룹 (재벌)의 계열사 지분은 평균 43.6%에 달한다. 오히려 일가는 실제 소유권이 4.4%에 불과한데도, 계열사 지분을 더해 50%에 가까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³⁷⁾

〈OECD 한국 경제조사〉 최신호는 지난 10년 동안 내부 지분 (inside ownership), 즉 총수 일가와 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이 증가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 지분율은 1980년대

35)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David Murillo and Yun-dal Sung: Understanding Korean Capitalism: Chaebols and their Corporate Governance, ESADEgeoo Position Paper 33, September 2013

36) Andolfo Immacolata: Chaebols, the engine of the Korean economy: a case study of the Samsung Group, Tesi di Laurea in Corporate strategies, LUISS Guido Carli, 2018, p. 60; 다음 글도 보라. David Murillo and Yun-dal Sung: Understanding Korean Capitalism: Chaebols and their Corporate Governance, pp. 2-5

37) Hae-Young Ryua, Soo-Joon Chaeb, Moon-Kyung Choc: The Control-Ownership Wed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vidence from Korean Business Groups (Chaebols), in: GLOBAL BUSINESS & FINANCE REVIEW, Vol. 22, Issue 4 (Winter 2017), p. 17

후반에서 2005년까지 40에서 50% 사이였지만 그 이후로 50에서 60%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 독점자본 주요 일가들은 지난 25년 동안 지배력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³⁸⁾

최근 발간된 보고서는 오너 일가의 재벌 지배를 다음과 같이 성격규정 하고 있다. "모든 재벌에서 -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러한 유형의 대기업집단의 주 특징이기도 한데 - 그룹 내 모든 중요한 직위는 가족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능력본위로 정해지지 않는다. 권력은 보통 장남이나 선택된 후계자에게로 넘어간다."³⁹⁾

더욱이 재벌들은 또한 전통적으로 국가기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재벌들의 성공은 보조금, 대출, 세제 특혜 등의 형태로 수십 년 동안의 정부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레닌이 제국주의 독점체가 제국주의 국가기구와 하나로 합체되는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두고 표현한 그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38) 2018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Achieving a new paradigm for inclusive growth, Sejong, 20 June 2018, p. 17

39) Andolfo Immacolata: Chaebols, the engine of the Korean economy: a case study of the Samsung Group, Tesi di Laurea in Corporate strategies, LUISS Guido Carli, 2018, p. 22

6. 한국 독점자본: 세계시장에서의 글로벌 플레이어

한국의 재벌들은 국내시장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 앞 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삼성, 현대 등은 자신들 사업 부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기업이다. 이것은 세계 최고 기업 순위 리스트에서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Fortune Global 500)에 따르면 한국은 3.2%의 점유율로 7위에 (6위인 영국보다 기업 수에서 단 하나 차이로) 올라 있다. (표 5 참조)

표 5. 글로벌 500대 기업 상위 10개국, 2019년⁴⁰⁾

순위	나라	기업수	점유율(%)
1	미국	121	24.2%
2	중국	119	23.8%
3	일본	52	10.4%
4	프랑스	31	6.2%
5	독일	29	5.8%
6	영국	17	3.4%

40) 2019 Fortune Global 500, <https://fortune.com/global500/2019/search/>

7	한국	16	3,2%
8	스위스	14	2,8%
9	캐나다	13	2,6%
10	네덜란드	12	2,4%

2017년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 (Forbes Global 2000 List)에서 한국은 프랑스와 독일보다 더 많은 기업 수(64개)로 5위까지 올라 있다! (표 6 참조)

표 6. 국가별 세계 2000대 기업, 2003년 및 2017년 (Forbes Global 2000 List)⁴¹⁾

	2003년		2017년	
	기업 수	점유율	기업 수	점유율
미국	776	38,8%	565	28,2%
중국	13	0,6%	263	13,1%
일본	331	16,5%	229	11,4%
영국	132	6,6%	91	4,5%
한국	55	2,7%	64	3,2%
프랑스	67	3,3%	59	2,9%

41) Forbes Global 2000 List (2017), <https://www.forbes.com/global2000/list/45/#tab:overall>; 또 다음을 보라. Josie Cox: Chinese banks dominate Forbes ranking of world's biggest public companies, 24 May 2017, The Independent Online, <http://www.independent.co.uk/news/business/news/china-banks-forbes-ranking-world-biggest-companies-industrial-commercial-bank-of-china-china-a7752896.html>; Tzu-Han Yang and Deng-Shing Hua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FDI and the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National Taipei University Academia Sinica, Feb. 4, 2011, p. 3; <http://hi.knoema.com/nhmovec/the-world-s-biggest-public-companies-2017>

캐나다	50	2,5%	58	2,9%
인도	20	1,0%	58	2,9%
독일	64	3,2	51	2,5%

세계 억만장자/슈퍼리치 순위를 보더라도 비슷한 그림이 나온다. 국제 컨설팅업체 캡제미니가 최근 발표한 <월드 부(富) 보고서 2018>에 따르면, 한국에 24만 3천명의 이른바 고액순자산보유자 (high-net-worth individuals) [독점 부르주아지가 스스로를 성격규정 하는 가당찮은 범주들 중의 하나]가 있고, 이는 세계에서 한국이 13번째로 많은 나라다.⁴²⁾ 또 다른 연례 보고서,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행하는 <글로벌 부 보고서 2019>도 비슷한 결론에 이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 달러 기준] 백만장자 수가 74만 1천명이고, 세계 순위로는 14위다.⁴³⁾

마지막으로 후룬 글로벌 부자 리스트 (胡潤全球富豪榜) 최신 호의 결과를 보자. 앞에서 언급한 기관들과는 달리 후룬연구소는 서방 제국주의 나라들이 아닌 새로운 제국주의 대국,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백만장자 순위에서 12위 일본보다 단 두 명 적은 13위로 올라 있다.⁴⁴⁾

42) Capgemini: World Wealth Report 2018, p. 11

43) Credit Suisse Research Institute: Global wealth report 2019, p. 31

44) LEXUS: Hurun China Rich List 2019, Hurun Research Institute, 2019-10-10 <http://>

요컨대, 지금까지의 수치들이 보여주는 것은,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한국인 소유 독점체들이며, 이들은 자본주의 세계시장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7. 한국 독점자본: 자본수출의 역할

위에서 설명했듯이, 제국주의 국가의 본질적인 특징은 독점의 형성 및 독점의 경제 지배뿐만 아니라 자본수출이다. 실제로 한국은 자본수출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이 여전히 반식민지 성격을 지녔던 시기에 한국은 무엇보다도 외국인 투자의 목적지였다. 그러나 한국 독점자본의 형성과 함께 이 과정은 역전되었다. 외국 자본이 계속해서 한국에 유입되는 -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자본주의국에서 그렇듯이 - 동안 한국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시작했다.

UNCTAD <세계 투자 보고서> 최신판의 수치들은 이 과정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2013년과 2018년 사이에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연간 유출은 언제나 유입의 2-3배였다. (표 7 참조)

www.hurun.net/EN/Article/Details?num=CE08472BB47D

표 7. 한국의 FDI 흐름, 2013-2018년 (미화 백만 달러)⁴⁵⁾

	2013년	2014	2015	2016	2017	2018
FDI 유입	12,767	9,274	4,104	12,10	17,913	14,479
FDI 유출	28,318	27,999	23,687	29,890	34,069	38,917

외국인 직접투자 누적 총액 수치를 보면, 2000년대 이래 한국이 반식민지에서 제국주의 국가로 전화하는 과정이 분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2000년에 FDI 유입 잔액이 유출 잔액보다 두 배 이상 (437억 달러 대 215억 달러)이었던 것이 2018년까지는 이 관계가 역전 된다 (2314억 달러 대 3867억 달러). (표 8 참조)

표 8. 한국의 FDI 잔액, 2000년, 2010년, 2018년 (미화 백만 달러)⁴⁶⁾

	2000년	2010	2018
FDI유입잔액	43,738	135,500	231,409
FDI유출잔액	21,497	144,032	387,591

한국 재벌들은 2000년대에 중국, 동유럽, 동남아시아, 인도 등지에 대규모 공장 (자동차, 철강, 정유, 전자 등)을 짓기 시

45)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9, United Nations, New York, p. 213

46) 같은 문서, 217쪽.

작했다.⁴⁷⁾ 한국의 유출 FDI의 많은 부분이 제조업에 집중되었다. 재벌들의 이러한 투자는 현지 시장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반식민지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 값싼 노동인력을 착취하고 그럼으로써 초과이윤을 뽑아내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은 한국 FDI의 가장 큰 목적지들이었다.⁴⁸⁾ 대미 투자 동기가 주로 이 거대한 시장에 한국의 자동차, 철강, 전자 생산업체들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기 위한 것인데 비해 대중 투자의 경우는 처음에 상황이 달랐다. “대중 FDI의 주된 동기는 처음에 값싼 노동력 이점을 이용하는 것에서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중국 소비시장의 개발로 동기가 바뀌었다. 이 데이터는 비용 우위 달성에서 시장 모색으로 동기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에는 대중 투자 중 값싼 노동력에 대한 투자 비중이 27.22%에 달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이 수치는 21.13%로 떨어졌다. 반면 현지시장 공략을 겨냥한 투자는 5.43%에서 40.57%로 크게 늘었다. 특히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비율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47)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James H. Alvis: *Developments in Korea's Overseas Foreign Direct Investments*, 2016

48) Kim, J-Y., Driffield, N, and Temouri, Y.: *The changing nature of South Korean FDI to China*, *Int. J. Multinational Corporation Strategy*, Vol. 1, Nos. 3/4 (2016), p. 270

체 투자의 52.89%였다. 하지만 값싼 노동력 이점을 노린 투자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18.1%로 줄었다.”⁴⁹⁾

이러한 변화는 또한 중국 자신의 변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자. 1990년대 초 자본주의 복고 이후 시기에 중국은 다소 미발달한 자본주의 나라에서 2000년대 말까지는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전화하였다.⁵⁰⁾

지난 20년 동안 점점 더 반식민지 나라들이 한국의 유출 FDI의 중요한 목적지가 되었다. “한국의 투자 흐름은 초기에 선진국들로, 특히 미국으로 많은 부분이 향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상대적 저발전 나라들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다.”⁵¹⁾ 특히 동남아시아로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의 큰 초점이 있었다. (표 9 참조)

표 9. 한국의 동남아시아 유출 FDI, 순 유출 (미화 백만 달러)⁵²⁾

49) 같은 글, 277쪽.

50) RCIT는 중국에서 자본주의 복고 및 중국의 제국주의 강대국으로의 굴기 과정을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이 문제에 관한 우리의 문서들을 다음 우리 웹사이트 상의 특별 섹션에 모아놓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모든 발행물을 온라인에서 읽을 수 있고, 이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특히 독자들에게 다음을 참조할 것을 권한다. Michael Pröbsting: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2012),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51) Hongshik Lee: The Destination of Outward FDI and the Performance of South Korean Multinationals,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46:3 (2010), p. 60

52) Oh, J.H. and Mah, J.S.: The Patterns of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Vietnam, *Open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5 (2017), p. 262

연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2001	62	-302
2002	99	69
2003	177	372
2004	176	646
2005	168	338
2006	632	658
2007	1505	940
2008	1094	437
2009	782	1007
2010	1384	2321
2011	891	1661
2001-2011	6970	8147

베트남은 특히 중요한 한국의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목적지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베트남은 한국의 4대 투자 목적지가 되었다. “베트남이 도이모이(Doi Moi) 이니셔티브를 통해 FDI에 문을 열고 한국 정부가 OFDI (유출 FDI)에 적극 나서면서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FDI는 2014년 말 현재 지난 23년간의 누적금액이 110억 달러로 급증했다.”⁵³⁾ 이미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53) Oh, J.H. and Mah, J.S.: The Patterns of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Vietnam, Open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5 (2017), p. 261

아에서 일찌감치 한국 FDI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었지만, 2015년 5월에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이 과정은 가속화되었다. 이 과정은 한국의 베트남 수출 증가와 병행되었다. 표 10에서는 베트남이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한국 수출의 세 번째로 큰 목적지가 되었음을 볼 수 있다.

표 10. 한국의 최고 수출 시장⁵⁴⁾ - 나라별 수출액 백분율

	2014년	2015	2016	2017
중국	25.4	26.0	25.1	24.8
미국	12.3	13.3	13.4	12.0
베트남	3.9	5.3	6.6	8.3
홍콩	4.8	5.8	6.6	6.8
일본	5.6	4.9	4.9	4.7
호주	1.8	2.1	1.5	3.5
인도	2.2	2.3	2.3	2.6
대만	2.6	2.3	2.5	2.6
싱가포르	4.1	2.8	2.5	2.0
멕시코	1.9	2.1	2.0	1.9

또 다른 예는 아프리카에서 한국 독점자본의 비중이 커져가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도 한국 독점자본은 값싼 노동인력을

54) OECD Economic Surveys: Korea (Overview), 2018, p. 13

착취하고 그럼으로써 제국주의 초과이윤을 뽑아내고 있다.⁵⁵⁾

요약하면, 한국 경제는 전화 과정을 거쳐 내국 독점자본의 형성을 가져왔는데, 이 독점자본은 국내시장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었다. 더욱이 한국 독점자본은 미국과 서유럽 같은 선진 자본주의 경제국들과 중국 같은 신흥 자본주의 경제국들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경제국들 같은 반식민지 나라들에도 성공적으로 침투하였다. 모든 시장에서 경쟁하는 강력한 독점자본의 형성으로 남한은 2000 년대를 거치며 마침내 제국주의로 전화하였다.

55) Murad Shamilov: South Korea in Africa: Exporting an 'Economic Miracle' or 'Imperialist Mimicry'?, in: Justin van der Merwe, Ian Taylor, Alexandra Arkhangelskaya (Ed.): Emerging Powers in Africa, A New Wave in the Relationship?, Palgrave Macmillan, Cham 2016, pp. 201-216

Ⅲ. 남한의 제국주의로의 전화에서 비롯하는 몇 가지 정치적 문제들에 대하여

8. 노동귀족층의 대두와 남한 노동자계급 내 불평등

1987년 이후 군사독재의 퇴장과 1989-91년 소련 및 동유럽에서 스탈린주의 지배의 붕괴가 남한 자본주의에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냈다. 1987년과 그 후 몇 년간의 결정적인 시기에 수많은 영웅적인 파업과 공장점거가 이어진 일련의 중요한 계급 전투들이 있었다. 노동자계급은 - 특히 노동조합원 비율이 높은 대사업장들에서 - 많은 경제적 성과물을 쟁취했지만, 남한이 제국주의로 전화하면서 독점 부르주아지에게 막대한 초과이윤을 공급함에 따라 이로써 계급투쟁 격화를 최종적으로 가리אות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맑스주의자들이 노동귀족층으로 성격규정하는 노동자계급 내 특권적 층이 제국주의로의 전화와 함께 생겨났다. 먼저 이 노동귀족층 개념을 간략히 개괄하고 넘어가자. RCIT는 노동자계급이 동질적인 단위라기보다는 여러 겹으로, 다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임을 반복해서 지적해왔다.

광범한 프롤레타리아트 대중 - 노동자계급의 중·하층 - 과는 대조되는 상층이, 보다 특권적인 층이 존재한다. 맑스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의 이 최상위 부분을 노동귀족층이라고 부른다. 이 노동귀족층은 일차적으로 더 나은 보수를 받는 숙련 노동자 부분들로 구성된 층이다. 실제로 프롤레타리아트의 이 부분은 부르주아지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미끼로 매수한 부분이다. 제국주의 나라에서 이 층은 반식민지 나라와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비율을 노동자계급 속에서 점한다.⁵⁶⁾

제국주의 나라에서 노동귀족을 매수하여 노동자계급의 결속을 해칠 재원은 다름 아니라 독점 자본가들이 반식민지 나라에서 노동자계급을 (그리고 제국주의 대도시들로 이주해온 노동자들을) 초과착취 하여 획득한 초과이윤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독점자본은 이 초과이윤의 일부를 제국주의 중심부의 노동자계급 상층 부분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사용한다. 자본가들이 일차적으로 안정을 필요로 하는 곳은 국내이기 때문이다.⁵⁷⁾

56)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다음 책의 Ⅲ장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Marxism and the United Front Tactic Today. The Struggle for Proletarian Hegemony in the Liberation Movement in Semi-Colonial and Imperialist Countries in the present Period, RCIT Books, Vienna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book-united-front/>

5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제국주의 나라에서 노동조합과 개량주의 당을 주도하는 것이 노동관료 - 그 직접적 지지 기반인 노동귀족층과 함께 - 다. 이들 세력이 그와 같이 계급협조주의로 계급투쟁을 가라 앉히고 계급투쟁에 대한 억제 브레이크로 기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본에 의해 매수된 노동귀족층의 창출 및 그로 인한 노동자 운동의 개량주의적 관료화는 한국에 특유한 현상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제국주의 시대의 시작 이래 존재하는 글로벌한 경향이다. 이 점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아니 일백년 전부터 혁명적 노동자운동이 강조해온 바다. 1919년 볼셰비키 당 8차 대회에서 채택한 강령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 조류 [기회주의·사회배외주의의 조류]가 만들어진 것은,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부르주아지가 식민지 약소민족을 강탈하여 획득한 초과이윤으로 자국 프롤레타리아트의 상층을 특권적 위치로 상승시켜주고 그들을 매수하고 평화 시에 관찮은 소부르주아적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고 이 층의 지도자들을 자신의 부관으로 임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⁵⁸⁾

또 공산주의 인터내셔널도 1920년 2차 대회의 주요 결의안 중 하나에서 제국주의 초과이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달

58) Program of the CPSU (Bolsheviks), adopted March 22, 1919 at the Eighth Congress of the Russian Communist Party, <http://www.marxists.org/history/ussr/government/1919/03/22.htm>

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혁명적 노동계급 운동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이들 나라 자본가들이 식민지 보유와 금융자본에 의한 초과이윤 획득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크고 더 안정적인 노동귀족층 - 노동자계급의 작은 소수를 이루는 부분 - 을 창출해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⁵⁹⁾

이윤 증가가 한국 독점 부르주아지를 강화시켜 소수의 노동귀족 상층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프롤레타리아트의 하층에 속하는 노동자 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여러 수치들을 통해 이러한 추이를 뚜렷이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계급 내 분할의 경험적 증거를 ILO가 최근 발표한 연구 속에서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노동자의 하층 60%는 2017년 전체 노동 소득 가운데 단지 27.2%만을 차지한다. 이는 30.48%를 차지하는 상위 10분위(상층 10%)의 소득보다 작은 것이다! 아래의 표 11에서 보듯이, 이러한 정도의 불평등은 일본과 독일 같은 주요 제국주의 나라들의 불평등 정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다.

59) Communist International: Theses on the Basic Task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920), Resolution of the Second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in, John Riddell (Editor): Workers of the World and Oppressed People, Unite! Proceedings and Documents of the Second Congress, 1920, New York 1991, p. 755

표 11. 한국 · 일본 · 독일 · 미국의 노동소득 분배율, 2017년 (%)⁶⁰⁾

	10개 분위별 노동소득 분배율									
	1	2	3	4	5	6	7	8	9	10
한국	1,05	2,38	3,71	5,12	6,54	8,42	10,63	13,65	18,04	30,48
일본	1,10	2,53	3,94	5,42	6,89	8,79	11,09	14,13	18,47	27,64
독일	1,10	2,77	4,81	6,55	8,30	9,83	11,36	13,27	16,09	25,92
미국	1,41	3,04	4,28	5,46	6,70	8,12	9,78	12,14	15,95	33,12

임금 불평등 추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한국 사회의 전
화 과정의 결과로 한국 노동자계급 내 질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한국 프롤레타리아트 내 소득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OECD의 연구에 따르면 1965-89년 기간
에 소득분배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소득 비율은 국제평균
치에 크게 못 미쳤다.⁶¹⁾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에 계급투쟁의 고양으로 임금 불
평등은 심지어 줄어들었다. OECD 수치에 따르면 1984년에서
1994년 사이에 한국의 임금 격차는 - 국제적 추이와는 극히

60)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The Global Labour Income Share and Distribution (Excel file with Data), July 2019, https://www.ilo.org/global/statistics-and-databases/publications/WCMS_712232/lang--en/index.htm and <https://ilostat.ilo.org/topics/labour-income/>

61) OECD: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 2013, pp. 44-45

대조적으로 - 5분의 1 이상 줄어들었다.⁶²⁾

그러나 이후 계급전투들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패배하고 남한 제국주의가 부상한 결과로 이러한 추세는 급격히 역전되었다. 자본가계급은 잉여가치율을 높일 수 있었다. 또는 일단의 부르주아 IMF 경제학자들의 말로 옮기자면, “노동소득 증가율이 1990년 중반 이후 이윤에 비해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노동소득 분배율이 꾸준히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⁶³⁾ 2015년 G20 회의를 위해 준비한 연구에 따르면, 1991년에서 2012년 사이에 한국의 조정 노동소득 분배율은 10% 하락하였다!⁶⁴⁾

이 같은 추이와 연동된 것이 남한 노동자계급 내 임금 격차의 대폭 확대, 즉 프롤레타리아트 내 증대되는 불평등이었다. 또 다른 IMF 경제학자들의 연구는 이렇게 보고한다. “1990-1997년 기간 동안 노동소득 증가율은 10% 이상으로 높았고 전 소득 분위에 걸쳐 상대적으로 균등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은 급격히 감소

62) 같은 문서, 70-71쪽.

63) Yangkyoon Byeon, Kwanghae Choi, Heenam Choi, and Jun I. Kim: Korea's Paradigm Shift for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A Proposal, IMF Working Paper, November 2017, p. 8

64) Income inequality and labour income share in G20 countries: Trends, Impacts and Causes; issu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the World Bank Group, Prepared for the G20 Labour and Employment Ministers Meeting and Joint Meeting with the G20 Finance Ministers, Ankara, Turkey, 3-4 September 2015, p. 11

했고 소득 집단에 따라 불균등해졌다. 실제로 소득분배율 하위 10%의 노동자는 소득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반면 상위 10%의 노동자는 연간 약 6%의 성장을 경험했다.”⁶⁵⁾ 아래 표 12에서도 같은 추세가 나타난다. 그 결과로 한국은 OECD에서 두 번째로 임금격차가 큰 나라가 되었다.⁶⁶⁾

표 12. 임금 불평등: 한국 임금 취득자 상위 10%와 하위 10% 간 소득 격차, 1980-2008년⁶⁷⁾

1980	1990	2000	2008
4.1	3.2	3.7	4.7

이러한 추이에서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비정규직 노동자 부문(즉 기간제, 파트타임, 파견·용역 노동자)의 창출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8년 하반기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3분의 1을 접하며, “시간당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2/3 수준을 받는다. 임시직 노동자의 숙련도가 상용직 핵심생산인구(prime age worker)의 숙련도에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⁶⁸⁾

65) Yangkyoon Byeon, Kwanghae Choi, Heenam Choi, and Jun I. Kim: Korea's Paradigm Shift for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A Proposal, IMF Working Paper, November 2017, p. 8

66) OECD: Towards Better Social and Employment Security in Korea, Connecting People with Jobs, OECD Publishing, Paris, 2018, p. 34

67) Stephen Machin and John Van Reenen: Inequality: Still Higher, But Labour's Policies Kept it Down (2010), p. 4; <http://cep.lse.ac.uk/pubs/download/ea015.pdf>

68) OECD Economic Surveys: Korea (Overview), 2018, p. 37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회보장 및 이른바 사내 복지에 대한 접근권이 취약하기 때문에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표 13도 참조)

표 13.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및 임금 비율, 2016년⁶⁹⁾

고용 인원

[전체] 임금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1962만 7천명	644만 4천명 (32.8%)

정규직 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 시간당 임금 (정규직 노동자 = 100)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100.0	65.4

특히 여성 노동자가 이러한 임금 불평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2016년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보다 37% 낮았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⁷⁰⁾ 이런 상황의 중요한 원인은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2016년 여성 피고용자의 41.1%가 비정규직으로, 남성 26.4%에 크게 대비된다.⁷¹⁾

69) OECD: Towards Better Social and Employment Security in Korea, Connecting People with Jobs, OECD Publishing, Paris, 2018, p. 34

70) OECD Economic Surveys: Korea (Overview), 2018, p. 34

71) 같은 문서, 37-38쪽.

임금 불평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만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 간에도 존재한다. 2013년 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중위 임금의 3분의 2가 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거의 1/4에 달했는데 이는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⁷²⁾

한국 독점 부르주아지가 다시 군사독재를 불러들이지 않고 민주주의 반혁명을 통해 노동자 전위를 패퇴시킬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다름 아니라 한국이 제국주의로 전화함에 따라 한국 독점 부르주아지가 강화된 것에 있다. 한국 독점 부르주아지가 1987년 이후 성립된 제한적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폐지하지 않고서 노동자운동을 패퇴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9. 남한 제국주의의 정치적 역할과 그 제한적인 독자성

이미 위에서 말했듯이, 신흥 남한 제국주의는 역사적 특수성을 띠고 있다. 남한 제국주의는 강력한 경제적 지위에 있지만, 1945년 이래 미 제국주의의 지배적인 영향력에 의해 그 정치적 역할은 여전히 가려져 있다. 미국은 한국에 수많은 군사

72)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 p. 122

기지를 세웠다 (현재는 폐쇄된 곳이 많긴 하지만). 현재 한국에는 약 28,500명의 미군 병력과 함께 수백 대의 탱크와 공군이 주둔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소위 사드 미사일 포대를 한국에 배치했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정치적 지배를 마주하고 있다.

이른바 “민족해방(NL)” 조류의 각 조직들은 미 제국주의의 이러한 지배적인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들어 한국을 “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강조했듯이, 이러한 상황은 제국주의 국가에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일본에도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점령된 이후 비슷한 형국이 존재한다. 약 5만 명의 미군 병력과 함께 오키나와 미군기지, 그리고 일본 헌법의 강요된 “평화주의”적 성격은 여전히 일본 제국주의의 제한적인 정치·군사적 자율성을 반영한다. 1990년까지 서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존재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본주의 나라들 (제국주의 나라들을 포함하여)은 경제적·정치군사적 구성이 동일하지 않다. 오히려 자본주의 나라들은 불균등한 방식으로 발전했다. 한국의 경우에 부르주아지는 경제적 분야에서는 강력한 자본가계급으로 발전했지만, 정치·군사적으로는 더 강한 제국주의 강대국에

지금까지도 종속적인 지위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실제로 일본공산당은 1945년 이래 오늘까지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임을 부인해오면서 그 스탈린주의적 본질의 한 측면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가 다른 데서 보여주었듯이, 일공은 미국의 지배적인 정치·군사적 역할을 들어 그 같은 터무니없는 부인을 정당화했다.⁷³⁾ 결국 그러한 부인은 "반제국주의"를 가장하여 내국 독점 부르주아지에게 사회제국주의적으로 투항하는 것, 오직 이러한 결말 이외에 다른 것일 수가 없다.

더욱이 한국의 정치적 지위는 유의미한 변화를 겪고 있다. 2019년에 시작한 일본과의 무역전쟁은 남한 제국주의의 독자적인 정치적 역할이 커져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 한·일 무역전쟁은 미국에게는 아시아의 두 주요 동맹국이 연루되어 있으므로 확실히 이득 될 게 없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 지배의 쇠퇴로 인해 한국도, 일본도 모두 정치적 독자성을 키워가고 있다. 한국 측이 이니셔티브를 준 대일 무역전쟁은 제국주의 한국이 경제 열강만이 아니라 정치 열강으로서도 부상하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강력한 증거다.

73) 일본 스탈린주의자들의 사회애국주의적 입장에 대한 보다 상세한 비판으로는 우리의 책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23장을 보라.

한국 지배계급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강점기 역사의 트라우마로 인한 시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능숙하게 악용하고 있다. 일본의 강제징용과 성노예 만행은 한국 인민의 기억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그러나 한국 부르주아지는 반일 배외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러한 감정을 활용한다. 한국 부르주아지는 일본 라이벌들을 밀어내서 국내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을 획득하기 위해 (대중적인 “일본 불매” 운동을 통해) 이러한 배외주의 캠페인을 이용한다. 또 부르주아지는 독자적인 정치 열강으로서의 한국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이러한 감정과 캠페인을 이용한다.

또 다른 중요한 정치적 문제는 남북 관계, 특히 한반도 통일 문제다. 잘 알려진 것처럼, 1950-53년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분단으로 결과했다. 오랜 동안 미 제국주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지속해왔다.⁷⁴⁾ 최근에 양측 간에

7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North Korea: Stop the American Warmongers! Defend North Korea against the Madman of US Imperialism! Down with the imperialis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No political support for the Stalinist Kim Regime! 11 August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stop-us-madman-threatening-north-korea/>; RCIT: US Sanctions against Russia, Iran, and North Korea are an Economic Declaration of War, 30 July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north-america/us-sanctions-vs-russia-iran-north-korea/>; RCIT: North Korea: Stop the War Mongering of US Imperialism! 4 April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us-aggression-vs-north-korea/>; RCIT: New Imperialist Threats in East Asia: Hands off North Korea! 12.3.201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defend-northkorea/>; RCIT: No

모종의 협상이 진행되어 왔지만 이것이 어떤 합의로 결과할지는 불분명하다.⁷⁵⁾

명백히 한반도 통일에는 큰 정치적 장애물들이 – 전통적인 남북 정권 간 적대에서부터 미국·일본 같은 강대국들의 반대까지 – 놓여있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는 한국 독점 부르주아 지에게 준 그 깊은 인상을 잃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1990년 독일 통일은 이 제국주의 국가를 강화시켜준 중요한 한 걸음이었기 때문이다.

계다가 북한에서 자본주의 복고 과정의 시작은 이 나라에 새로운 부르주아지가 대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급, 자본가계급은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에 합류하는 데 관심과 이해를 가질 수 있다. 당연히 새로운 북한 부르주아지는 가난한 반식민지 대신에 남측 제국주의자들의 하위 파트너가 되고자 할 것이다.⁷⁶⁾

War against North Korea! Call for Protests on the Day when a War starts! 6.4.201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no-war-against-north-korea/>; Michael Pröbsting: US Aggression against North Korea: The CWI's "Socialist" Pacifism, 12.09.2017,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wi-and-north-korea/>

7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Has the Trump–Kim Summit Opened the Road to Peace in East Asia? 14.06.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has-the-trump-kim-summit-opened-the-roadto-peace-in-east-asia/>

76) 북한에서의 자본주의 복고 문제에 대해서는 독자들에게 우리가 최근에 발표한 다음 글들을 권한다. Michael Pröbsting: Has Capitali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Crossed the

IV. 몇몇 반론에 대하여

10. 남한이 여전히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지라는 스탈린주의적 신화

이제 남한의 제국주의적 전화에 대한 우리의 분석을 강하게 거부하는 스탈린주의 “민족해방” 조류의 입장을 다루어보자. 부분적으로, “민족해방” 조류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미 제국주의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들어 자신들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위에서 밝혔듯이, 그러한 주장은 한국

Rubicon or Not? Reply to a Polemic of Władza Rad (Poland), 15 Jul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has-capitalist-restoration-in-north-korea-crossed-the-rubicon-or-not/>; Michael Pröbsting: In What Sense Can One Speak of Capitali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Reply to Several Objections Raised by the Polish Comrades of “Władza Rad”, 21 June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north-korea-and-the-marxist-theory-of-capitalist-restoration/>; Michael Pröbsting: Again on Capitali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12 June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again-on-capitalist-restoration-in-north-korea/>; Michael Pröbsting: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pp. 95–105

독점자본의 형성 및 세계시장에서의 그 강력한 지위를 전면 부인한다. 그러한 주장은 레닌이 제시한 바의 제국주의론 전체를 암묵적으로 거부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독점자본의 중심적 지위를 그러한 주장이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러한 주장은 그 지지자들을 매우 위험한 논리로 이끄는 데, 왜냐하면 그들이 한국의 제국주의적 성격뿐만 아니라 일본과 독일, 그리고 그 밖에 제국주의 강대국에 정치적으로 종속된 (나토 내에서 또는 유럽연합 내에서) 여러 작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성격도 역시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그러한 입장은 곧바로 사회제국주의 진영으로 - “반제국주의”를 가장하여 미국에 대해 한국 제국주의나 일본 또는 독일 제국주의를 편드는 것으로 - 빠져든다.

스탈린주의 “민족해방” 조류의 입장을 방어하는 또 다른 논거는 재벌이 사실상 한국의 독점자본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 또는 *일본 제국주의*의 하수인이라는 주장이다. 흔히 이러한 입장은 별 증거도 없이 제출되고 있는데, 이 입장을 사실들로 입증시켜보려는 일부 강단학자들의 시도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서울대 교수 장경섭은 한국 경제에 관한 새로운 책에서 자

본 자유화 과정이 대규모 외국인(제국주의) 자본 유입을 가져왔고, 이것은 외국인 자본이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한국 주요 기업과 은행의 많은 주식이 이미 IMF가 정한 바겐세일 조건(명목주가 급락, 환율 하락, 충격요법식 고금리 환경에서)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각됐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수많은 한국 제조업체와 은행의 새로운 대주주로서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투자자들은 일반 한국 시민들로부터 거둬들일 세금으로 재정적 뒷받침을 받는, 한국 정부의 부활한 선제적 산업정책에 호의적으로 기울어 왔다. 같은 이유로 그들은 노동소득을 억제하여 기업 수익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장하는 정부 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측면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⁷⁷⁾

그는 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2006년부터 30대 재벌 대기업들에서의 외국인 소유 주식에 대한 몇몇 수치를 제시한다.

인도의 대학교수 지텐드라 우탐도 2014년에 발표한 책에서 비슷한 주장을 펴다. 그는 한국 경제 상태를 “자유주의적 금

77) Chang Kyung-Sup: Developmental Liberalism in South Korea, Formation, Degeneration, and Transnationalization, Palgrave Macmillan, Cham 2019, p. 91

용 정책 하에서의 외국인 자본 지배”라고 성격규정 하며, 군사 독재 시절의 국가자본주의적 정책이 폐기된 것을 안타까워한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헤게모니와 씨름하다가 한국의 국내 엘리트들은 지배적인 글로벌 지식 시스템에 정책적 자율성을 내맡겼다... 한국에서 운영된, 위기 이후의 자유주의 금융 정책은 기업 투자를 적절히 촉진하지 못하고 금융 중개자로서도 성과가 미흡했으며, 오히려 한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외국인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⁷⁸⁾

그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치를 제시한다.

“금융 정책의 변화로 인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점유율은 1997년 말 14.6%에서 1999년 21.9%, 2001년 36.6%, 2004년 약 43%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비록 새롭게 부상한 글로벌 모순에 직면하여 2008년에는 30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말이다. 실제로, 외국인 자본은 한국에서 시장 지배자가 되었다. 은행업계의 외국인 자본 점유율은 1997년 16.4%에서 2003년 50.2%, 2007년 9월 57.8%로 높아졌다. 2008년 말 외국인 지분율은 7개 시중은행 중 한국 정부가 소유한 우리은행을 유일한 예외로 한 채 6개 은행에서 50%

78) Jitendra Uttam: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 Transition, Transformation and Turn-around, Palgrave Macmillan, Houndmills, 2014, pp. 192-193

를 넘었다.”⁷⁹⁾

두 저자 모두 기본적으로 결론에서 틀렸다. 첫째, 그들은 한국 경제에서의 외국인 자본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물론, 1990년대 동안 남한 국가가 - 세계시장의 압력 하에 - 재벌들 및 재벌들과 금융시장의 관계를 재편한 것은 사실이다. 또 남한 국가는 외국인 자본에 국내시장을 개방했으며, 동시에 한국 독점자본가들이 해외시장에서 수출과 투자를 늘리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한국의 재벌과 은행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의 점유율이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하는 외국인 자본 점유율은 전 세계 모든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실로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일어난 *세계화의 일반적* 특징이다.

다음 수치들은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2016년 한국에서 총고정자본형성 (GFCF)⁸⁰⁾ 대비 유입 외국인직접투자 (FDI)는 2.6%를 기록했다. GDP 대비 유입 FDI 잔액은 13.1%에 달했다.⁸¹⁾ 이들 수치를 다른 선진 제국주의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이들 나라에서 외국인 자본 비중은 단연코 한국보다 작

79) 같은 책 193쪽.

80) 부르주아 경제통계 용어법에서 “총고정자본형성”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범주는 연간 자본축적 과정을 반영한다.

81) South Korea: Foreign investment, <https://santandertrade.com/en/portal/establish-overseas/south-korea/foreign-investment>

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 참조)

표 14. 한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에서 유입 FDI, 2016년⁸²⁾

	<i>FDI 유입 (GFCF 대비 %)</i>	<i>FDI 잔액 (GDP 대비 %)</i>
한국	2.6%	13.1%
독일	1.4%	22.2%
스페인	7.6%	45.2%
영국	57.9%	45.5%
프랑스	5.4%	28.3%

세계화 시기에 한국 재벌들 대부분은 세계시장에서 다른 기업들과의 격화하는 경쟁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자본가들과의 동맹을 창출해냈다. 이것은 많은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일어난 과정이다. 르노-닛산-미쯔비시 또는 피아트-크라이슬러 국제동맹은 많은 예 중의 일부일 뿐이다.

결정적인 문제는 외국인 자본이 실제로 경제와 재벌 그룹들을 지배하느냐 아니냐다. 우리가 위에서 각종 수치들을 가지고 보여주었듯이, 한국 경제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재벌들은 대부분이 오너 일가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독자들에게 위에서 언급한 OECD 연구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내부 지분,

즉 총수 일가와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을 통해 지배적 한국 독점자본가들이 외국인 주주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들에 대한 지배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음을 보여준 연구 말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 말부터 2005년까지 내부 지분율은 40-50% 사이였는데, 그 이후 50-60%로 증대했다. 실제로 서방 기업과 기관들은 한국 기업들의 “투명성 결여”에 대해 정기적으로 개탄한다! 한국 재벌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OECD 보고는 없다. 한 예를 보자. “무역과 투자 장벽은 한국의 GDP 대비 FDI 잔액이 2014년 13%로 OECD 국가 중 밑에서 세 번째인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낮은 FDI 잔액은 명시적 장벽 외에도 비즈니스 환경을 비롯한 그 밖의 국내 규제를 반영하며, 따라서 규제개혁이야말로 한국에 더 많은 FDI를 유치하는 데 열쇠가 되고 있다.”⁸³⁾ 2년 뒤에 또 다른 OECD 보고서도 다시 개탄했다. “4대 그룹에서 창업자 일가의 소유지분이 평균 2%에 불과함에도 이들 그룹은 창업자 일가가 지배하고 있다. 총수 일가는 그룹 계열사에 대한 보유 주식을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며, 기업 지배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계열사 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할 수 있게 되었다. 사외이사제도 의무화 조항이 있지만,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는 드물다. 투명성의 결여는 한국 기업의 낮은 가격-수익률의 일

83)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 p. 93

원인 -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 이 되고 있다.”⁸⁴⁾

이와 같이, 일부 “맑스주의” 강단학자들이 한국 경제가 이른바 외국인 제국주의 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서방 제국주의의 대표자들은 한국 경제가 소수의 재벌총수 일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한국 경제학자 박형준이 보여주듯이, 지난 20년 동안 대부분 이득을 본 것은 외국인 자본이 아니라 한국의 재벌 오너 일가다. 이 저자에 따르면,

“전체 상장기업의 배당금 총액은 2001년 3조8000억 원에서 2007년 14조 원으로 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시적으로 배당금이 8조7000억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꽤 빨리 반등했다. 2010년과 2011년 국내 증시 상장기업들은 주주들에게 13조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은 2001년 1조2000억 원에서 2007년 5조6000억 원으로 늘어나 총 배당금 지급액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도 재벌 총수 일가는 누구보다도 배당금 지급이 급증한 덕을 봤다. 재벌 닷컴에 따르면, 재벌 총수 일가의 배당소득은 2001년 240억 원에서 2007년

84) OECD Economic Surveys: Korea (Overview), 2018, p. 4

1580억 원으로 늘었고, 나아가 2011년에는 1720억 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⁸⁵⁾

이 수치들은 외국인 자본에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화 과정에 합류한 것이 최종적으로 한국 독점자본의 종속 과정이 아니라 강화 과정으로 결과하였음을 반영하는 수치들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배적 자본가들이 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반대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⁸⁶⁾

더욱이 장경섭과 지텐드라 우탐은 외국인 자본의 역할을 극도로 과대평가한다. 한국 경제학자 성태윤과 김도연이 발표한 연구는 1996년에서 2015년 사이에 재벌 상장 제조업체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9%에서 15%로 증가한 반면, 비(非)재벌 상장 제조업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기본적으로 5% 수준에서 정체되었음을 보여준다.⁸⁷⁾ 이와 같이, 재벌 기업들의 외국인 소유 지분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명백한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은 여전히 내국인 재벌총수 일가다.

85) Hyeng-Joon Park: Korea's Post-1997 Restructuring: An Analysis of Capital as Power, in: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48(2), 2016, p. 306

86) 같은 글 305쪽

87) Taeyoon Sung and Doyeon Kim: How chaebol restructuring after the 1997 crisis has affected corporate decision and performance in Korea: debt financing, ownership structure, and investment, in: China Economic Journal, 10:2 (2017), p. 154

요약하면, 1990년대 이래 자본 자유화와 세계화 시기는 한국 시장을 외국인 자본에 개방한 것과 동시에 한국 자본에 의한 해외투자가 대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결과하였다. 또 한국 독점체와 외국 독점체 간의 동맹 창출로 결과하기도 했다. 요컨대 이 과정은 한국을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강대국에 종속된 반식민지 나라로 묶어두는 것으로 결과하지 않았다.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한국 자본가들의 지위 강화와 한국의 제국주의 열강으로의 전화로 결과하였다.

11. 아(亞)제국주의론의 오류

남한에 대한 계급적 성격규정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또 다른 예는 <노동자연대>라는 이름의 신문을 발행하는 한국 조직 “다함께”의 아제국주의론이다. 이 다함께와 같은 입장에 있는 국제사회주의경향(ISTI)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은 제국주의 문제에서 사이비 맑스주의적, 중도주의적 방법을 따르며 레닌주의적 제국주의 이론을 거부한다.⁸⁸⁾

88)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책의 9장과 13장을 보라. Michael Pröbsting's book: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s://www.theco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

SWP/IST의 새로운 제국주의 정의에서 핵심 요소는 아제국주의론의 옹호다. 이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1960년대에 브라질 사회주의자 루이 마우로 마리니다. 이 이론은 세계를 억압 민족과 피억압 민족으로, 제국주의 나라와 (반)식민지 나라로 구분하는 레닌의 방법을 거부하며, 제3의 범주의 나라들 (“아제국주의” 나라들)이 출현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미 다른 곳에서 이 이론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비판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갈 것이다.⁸⁹⁾

아제국주의론의 근본적인 방법론적 결함은 *착취·억압 관계*를 그 분석의 중심에 놓는 데 실패하고 있는 데 있다. 그러기는 커녕 오히려 이 중심 문제 – 맑스주의자들에게 중심적인 – 를 서술적, 질층적 방법으로 대체하여 나라들을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으로 각각 성격규정 한다. 또는 보다 큰 착취국과 보다 작은 착취국이라는 식의 질적 구분을 도입하여 이 양자 간의 기본적인 동일성을 흐리게 한다.

[south/](#)

89) 아제국주의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비판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책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의 9장을 독자들에게 권한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발표한 다음의 글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Semi-Colonial Intermediate Powers and the Theory of Sub-Imperialism, A contribution to an ongoing debate amongst Marxists and a proposal to tackle a theoretical problem*, 1 August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mi-colonial-intermediate-powers-and-the-theory-of-sub-imperialism/> [“반식민지 중위권 열강과 아(亞)제국주의론”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FA%B5%AD%EC%96%B4/semi-colonial-intermediate-powers-and-theory-of-sub-imperialism/>]

이 이론의 파산은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세계에 적용할 때 특히 분명해진다. 이 이론의 많은 옹호자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그와 같은 “아제국주의” 국가로 그릇되게 성격규정 하고, 그리하여 중·리가 제국주의 열강임을, 즉 그들의 라이벌들인 미국이나 서유럽이나 일본과 대등한 제국주의 강대국임을 부정한다. 따라서 이 이론은 사회주의자들을 “아제국주의” 진영 (즉 중·리)을 편드는 방향으로 오도함으로써 결국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사회애국주의적 투항과 다를 바 없는 결과로 빠져버린다.

SWP의 대표적 이론가 알렉스 캘리니코스와 IST는 맑스주의의 그러한 속류화가 어떤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생생한 본보기다. 캘리니코스는 1991년에 다음과 같은 나라들을 “아제국주의” 나라들로 성격규정 했다.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이집트, 시리아, 터키... 인도, 베트남, 남아공, 나이지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⁹⁰⁾ 근 30년 뒤에도 그가 이 잡탕 목록에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도 이 목록에 추가되었다.

90) Alex Callinicos: Marxism and Imperialism today, in: A. Callinicos, J. Rees, C. Harman & M. Haynes: Marxism and the New Imperialism, Bookmarks, London 1994, p. 45, <https://www.marxists.org/history/etol/writers/callinicos/1991/xx/imperialism.html>

클리프 파 SWP/IST는 이른바 “아제국주의” 나라가 제국주의 강대국의 침공에 직면했을 때 이 나라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기 위해 이 얼토당토 않는 “아제국주의”론을 사용한 바 있다. 1982년에 말비나스 전쟁에서 영국이 아르헨티나를 공격했을 때의 이야기다.⁹¹⁾ IST가 그들의 중립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 식의 아제국주의 버전을 사용한 때는, 아르헨티나를 편들고 영국의 패배를 내거는 것이 반제국주의적 맑스주의자들의 실제 의무였던 때였다. 그러나 캘리니코스과 IST는 정반대를 주장했다. “이 전쟁은 반(反)식민 투쟁도, 피억압 민족과 억압 민족 간의 투쟁도 아니다. 다투는 양측은, 하나는 지역적·대륙적 제국주의 특징을 가진 신흥 자본주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뚜렷한 쇠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세력인 기존의 오래된 제국주의 열강이다. 여기에는 진보적 진영도, 반동적 진영도 없다.”⁹²⁾

간단히 말해서 아제국주의론은 쓸모없고 위험한 이론이다. 변증법적이고 계급 지향적인 맑스주의 개념과는 달리, 아제국

91) 이 전쟁에 대한 우리 운동의 입장으로는,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Workers Power (Britain): Arguments on the Malvinas (198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rguments-on-the-malvinas-1982/> 또 다음 우리의 책자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12장 및 13장).

92) Alex Callinicos: Marxism and Imperialism today, pp. 50-51

주의론은 오히려 앵글로색슨 식 “영금영금 경험주의”(데보린)의 결함을 고수하는 접근법이다.

V. 반제국주의 강령과 혁명적 전술

12.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남한에 대한 우리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강령적 · 전술적 결론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겠다. 두루 알다시피, 제국주의 나라 내에서의 반제국주의 투쟁에 대한 맑스주의적 강령은 *패전주의*, 또는 보다 정확하게는 *혁명적 패전주의*로 알려져 있다. 이 강령을 간단한 정식으로 요약한다면 이러하다. i) 개개의 그리고 모든 제국주의 국가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지지도 거부한다. ii) 이들 제국주의 국가 중 그 어디든 그에 대항하는 모든 해방투쟁을 지지한다. iii) 모든 나라에서 제국주의 지배계급에게 패배를 안길

수 있도록 계급투쟁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국내적 위기와 난국을 이용한다. RCIT는 이미 이 문제에 관한 수많은 책자와 논설을 발표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한 요약정리로 국한하겠다.⁹³⁾

우리는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에서 이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분쟁 · 충돌 시에 맑스주의자들은 전 세계의 노동자 · 인민 조직들에게 단호히 국제 노동자계급 연대의 원칙을 기초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그들이 양쪽 어느 진영도 지지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상대방 제국주의 진영뿐만 아니라 ‘자국’ 지배계급의 편에 서는 것 또한 거부해야 한다.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들을 타도하라!* 사회주의자는 지배계급의 그 어떤 배외주의적 선전도 전면 거부한다. 사회주의자는 ‘자국’ 지배계급을 지지하지 않으며, 비타협적인 계급투쟁을 제창한다. (1차 세계대전에서 칼 리프크네히트가 제창한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유명한 구호를 받아 안아).

93) RCIT는 여러 출판물에서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을 다루었다. 가장 중요한 것들로는 다음을 보라. RCIT: Theses on Revolutionary Defeatism in Imperialist States, 8 Sept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ses-on-revolutionary-defeatism-in-imperialist-states/>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theses-on-revolutionary-defeatism-in-imperialist-states/>]; 또 위에서 언급한 다음의 책들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12장-22장),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12장 및 13장),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2장).

전쟁 시에 이 전략은, 1914년에 레닌과 볼셰비키 당이 정식 화한 바, 혁명가들은 “제국주의 전쟁의 내란으로의 전화”를 위해 투쟁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전쟁 조건 하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력 쟁취 투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같은 정신으로 우리는 무역전쟁을 국내의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정치적 계급 투쟁으로 전화할 것을 제창한다. 이 같은 강령이야말로 세계의 노동자계급을 국제주의적 기초 위에서 통일 단결시키는 단 하나의 길이다. 또 “애국주의적” 단결로 노동자들을 ‘자국’의 제국주의 부르주아지 및 노동자운동 내 이들 부르주아지의 시종들과 한 데 묶어놓고 있는 사슬을 깨는 단 하나의 길이다.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은 단지 전쟁이 발발해야만 유효성을 가지기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그 때에야 비로소 그 강령을 위해 투쟁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늦을 것이다), 지금부터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RCIT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제국주의 국가 간 분쟁에서 다음과 같은 전술을 배치할 것을 촉구한다.

i) 사회주의자들은 한 나라 인민의 다른 나라 인민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적 배외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 같은 국수주의는 노동 인민의 의식을 타락 오염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그 어

편 형태의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강대국 지지에 대해서도 단호한 반대 투쟁을 펼쳐야 한다. 그 강대국이 ‘자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든, 외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든.

ii) 제국주의 경쟁국에 대한 모든 종류의 경제제재 및 무역전쟁 조치에 반대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의무다.

iii)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형태의 강대국 간 군사주의와 군비경쟁과 전쟁에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

iv) 노동계급 조직들이 의회 기구에 대표자를 두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 같은 일체의 배외주의적 조치들에 반대투표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 그러나 결정적 계급투쟁 영역은 의회가 아니라 공장 · 직장을 비롯하여 지역, 학교 · 대학, 병영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선전물을 배포하고 계급투쟁적 행동(시위, 총파업으로 나아가는 파업, 항쟁 · 봉기 등)을 선동해야 하는 곳은 여기다.

v) 분쟁에 있는 제국주의 나라들 각각에서 혁명가들은 국경을 가로질러 사회주의자들, 노동조합, 그리고 그 밖의 노동자 · 인민 대중조직들의 공동 성명과 공동 활동을 제창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들은 구체적인 국제적 노동자계급 연대의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레닌이 발전시킨, 그리고 이후 초기 코민테른

과 이어서 트로츠키의 제4 인터내셔널이 옹호한 바의 그 강령이다. 레닌의 접근법에 깔려 있는 핵심 사상은 혁명가들이 계급투쟁 방법을 통해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을 촉진하고 ‘자’국 부르주아지의 혁명적 타도를 위해 전쟁 – 또는 기타 분쟁 – 이 야기한 위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바로 전쟁에서 ‘자’국 정부의 패배를 위한 분명한 입장이 나온다. “혁명적 계급은 반동적인 전쟁에서 자국 정부의 패배를 바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자명한 공리다. 의식적인 사회배외주의자 도당이나 그들의 영혼 없는 시종들만이 공리와 다툼다.”⁹⁴⁾ 이러한 접근법은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볼셰비키의 중심 슬로건은 “내란”이었다. “현 제국주의 전쟁의 내란으로의 전화는 단 하나의 올바른 프롤레타리아 슬로건이다.”⁹⁵⁾

위에서 밝혔듯이,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은 전쟁 시에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자’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와 싸우는 – 전쟁 시에만이 아니라 평화 시에도 – 기본 강령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엥겔스와 레닌은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⁹⁶⁾라는 유명한 말로 모든 군사적 충돌의 핵심을

94) V.I. Lenin: The Defeat of one's own Government in the Imperialist War (1915); in: LCW 21, p.275 [(《제국주의 전쟁에서 자국 정부의 패배》, 레닌전집 59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335쪽, 양효식 역, 아고라, 2018].

95) V.I. Lenin: The War and Russian Social-Democracy (1914); in: LCW 21, p.34 [(전쟁과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레닌전집 58권 (“마르크스”) 41쪽, 양효식 역, 아고라, 2018].

96) Carl von Clausewitz: Vom Kriege (1832), Hamburg 1963, p. 22; in English: Carl von Clausewitz: On War, <http://www.gutenberg.org/files/1946/1946-h/1946-h.htm>

요약한 19세기 초 프로이센 군사 이론가 클라우제비츠를 즐겨 인용하곤 했다.

이 말을 레닌은 다음과 같이 옮겼다. “전쟁과 관련하여, 부르주아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플레하노프가 그리도 파렴치하게 왜곡시킨 변증법의 근본 명제는 **“전쟁은 단지 다른 (즉 폭력적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 는 것이다. 이것은 전쟁사의 가장 위대한 저술가 중 한 사람인 클라우제비츠의 명제이다. (그의 사상은 헤겔로부터 자유분을 공급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입장이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어떠한 전쟁도 주어진 시기에 관련 강대국들의 — 그리고 이들 나라 내부의 각 계급들의 — 정치의 계속에 다름 아니라고 보았다.”⁹⁷⁾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전쟁 문제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접근법은 계급들 간의 투쟁의 그 밖의 측면들에 대한 접근법과 다르지 않으며 또 다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 정치는 전쟁 시에나 평화 시에나 모든 제국주의 열강의 지배계급 (및 그 분파들)으로부터 계급 독자성을 방어하는 데 맞추어진다. 또 전쟁 시에나 평화 시에나 자본가계급을 타격, 약화시키고 나아가 타도하는 투쟁에 맞추어진다.

97) V.I. Lenin: The Collapse of the Second International (1915), in: LCW Vol. 21, p.219 (고덕재 강조는 원문)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레닌전집 59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227쪽]

레닌은 전쟁 시에 뿐만 아니라 평화 시에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계급투쟁 원칙들을 지적했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 모든 전쟁은 그것을 낳는 정치체제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해당 국가가, 그 국가 내의 해당 계급이 전쟁 전 오랜 시간 동안 추구한 정치는 필연적으로 전쟁 중에도 그 동일한 계급에 의해 – 단지 행동의 형태가 달라질 뿐 – 계속되게 마련이다.”⁹⁸⁾

13. 오늘 남한에서 반제국주의적 임무

이러한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은 현 시기 남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혁명가들은 더 이상 남한을 다른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억압 받는 반식민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과거에는 이것이 맞았지만, 10년도 더 전 부터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남한의 혁명가들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외국 제국주의 열강과의 충돌 시에 자국을 방어하는 것이 의무였지만, 이제 더 이상 유효타당하지 않다.

98) V. I. Lenin: War and Revolution (1917), in: LCW 24, p. 400

오늘, 남한의 혁명가들은 “주적은 국내에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한에서 맑스주의자들이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남한과 같은 제국주의 나라에서 “민족해방”이란 내국 제국주의 독점 부르주아지에 대한 사회애국주의적 지지 이외에 다른 것일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한국의 혁명가들이 ‘자’국 정부의 배외주의적 대일(對日) 무역전쟁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혁명가들은 경제제재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소비재 보이콧 캠페인도 거부해야 한다. 당연히,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제재에 반대하는 것도 똑같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반동적 캠페인은 인민대중을 조종하고 종속시키려는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할 뿐임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혁명가들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국제적 통일단결을 요구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무역전쟁은 반일 배외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대중적 감정을 이용하는 한국 부르주아지의 이해에 봉사할 뿐임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부르주아지는 그들의 일본 라이벌들을 밀어내고 국내시장에서 더 큰 점유권을 획득하기 위해 그러한 캠페인을 이용한다. 또 한국 부르주아지는 정치적으로 독

자적인 제국주의 열강으로서 한국의 역할 증대를 갈구한다.⁹⁹⁾

이것이 혁명가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자행한 강제징용과 성노예 만행에서 살아남은 피해자 한국 시민들 (및 그들의 가족)의 정당한 우려를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물론이다. 반대로 혁명가들은 일본 기업과 일본 국가에 대한 그들의 배상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전쟁범죄로 인한 한국인 희생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한 투쟁은 *이들 희생자와 가족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되어야지, 재벌에게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귀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혁명가들이 대중적, 선동적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명가들은 불매 캠페인이 피해자 · 희생자 한국 시민의 이익이 아니라, 삼성, LG, 롯데의 이익에 봉사할 뿐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한 캠페인을 통해서 일본 라이벌들을 밀어내고 더 큰 시장 점유율을 획득할 수 있는 재벌들의 이익 말이다.

9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Down with the Imperialist Trade War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Down with all chauvinist boycott campaigns! Class War instead of Trade War! Joint Statement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s of South Korea and the RCIT, 19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trade-war-between-japan-and-south-korea/> [“한·일 제국주의 무역전쟁 분쇄”]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trade-war-between-japan-and-south-korea/>; Korea: There Is No Peace Without Overthrowing Imperialism and the Rule of Capital! Peace through the Proletarian Socialist Revolution! Joint Statement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s of South Korea and the RCIT, 8 March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rcit/joint-statement-on-south-korean-imperialism/> [“한반도 : 제국주의와 자본의 지배를 타도하지 않고는 평화는 없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joint-statement-on-south-korean-imperialism/>

요컨대 현재 일본과의 분쟁에서 한국 혁명가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은 슬로건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일 제국주의 무역전쟁 타도! 배외주의 반대! 보이콧 캠페인 반대! 한·일 노동자의 국제주의적 통일단결! 무역전쟁을 제국전쟁으로!**

또 혁명가들은 한·일 제국주의 양측의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분쟁에서 양측 제국주의 모두에 반대해야 한다. 여기서도 지배계급의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자신들 국가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데 복무하는 것일 뿐이다.

남한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투쟁한다고 해서 남한에서 우월적인 정치·군사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와 싸워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 이 점은 특히 미 군기지와 28,500명의 미 주둔군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현실 관련성을 갖는다. 중국을 겨냥한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도 쟁점이다. 혁명가들은 다음을 요구해야 한다. **주한미군 전원 철수! 미군기지 해체! 사드 배치 반대!**

나아가 미 제국주의를 비롯한 그 밖의 제국주의 열강의 도발·공격에 대항하는 북한 방어도 혁명가들의 중요한 임무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 (대북 제재)에 반대하며 전쟁 시에 북한의 적의 군사적 패배를 요구한다. 당연히 이러한 방어는 평양의 관료 국가자본주의 독재에 대한 단호한 반대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술은 한반도의 혁명적 통일 전략의 일부이며, 남한 부르주아지와 함께 북한 스탈린주의-자본가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투쟁의 일부다.

끝으로, 남한 독점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투쟁은 개량주의 세력 및 노조관료 지도부의 악영향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요구한다. 반일 배외주의 캠페인을 열렬히 지지하는 데서 매우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 이들 지도부들은 사회애국주의 강령을 옹호한다. 맑스주의자들은 지배계급이 성공적으로 그 지배를 지속해온 것은 그들 자신의 내적 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개량주의 노동관료로부터 받는 지지 때문이라는 것을 되풀이해서 강조해왔다.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미국 공산주의 및 트로츠키주의의 역사적인 지도자 제임스 캐넌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자본주의의 힘은 자본주의 자체나 자본주의 제도에 있지 않다. 자본주의가 살아남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본주의가 노동자 조직들 속에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오직 그 때문이다. 지금 보듯이, 러시아 혁명과 그 여파로부터 우리가 배운 바로 볼 때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옆에 아홉은 노동자 조직들 - 당을

포함하여 - 속의 부르주아 영향력에 대항하는 투쟁이다.”¹⁰⁰⁾

이와 같이 이들 개량주의 · 중도주의 세력이 국제 노동자 계급의 해방투쟁에 가로놓인 장애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맑스주의자들의 견해였다. 따라서 노동자 전위를 일관된 반제국주의 강령 쪽으로 전취하는 투쟁은, 사회제국주의 · 사회평화주의 세력들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정력적인 투쟁 없이는 전진할 수 없다. 볼셰비키의 다음과 같은 선언 - 1919년 강령 속에서 표명한 - 은 지금도 완전히 유효 타당하다.

“원칙의 문제에서 단호한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공식 사민당 · 사회당 지도부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부르주아적 왜곡에 대항하여 무자비한 투쟁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이들 조건은 실현될 수 없다. 그러한 왜곡은 한편으론, 말로는 사회주의를 공언하지만 실천에서는 배외주의적인 기회주의적 · 사회배외주의적 경향으로서,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1914-1918년의 제국주의 전쟁 중에는 탐욕스런 조국 이익의 방어를 은폐한다... 다른 한편으로 “중도주의” 운동도 사회주의에 대한 부르주아적 왜곡이다. 이 운동도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발견된다. 이 중도주의 운동은 사회배외주의자와 공

100) James P. Cannon: E.V. Debs (1956); in: James P. Cannon: The First Ten Years of American Communism, Pathfinder Press, New York 1962, p. 270

산주의자 사이를 동요하며, 사회배외주의자와의 연합을 내
걸고 파산한 제2인터내셔널을 되살려내고자 애쓴다.”¹⁰¹⁾

남한의 혁명가들은 스탈린주의 “민족해방” 조류를 노동운
동 내 남한 제국주의의 사회애국주의적 하수인이라고 비난한
다. 이들 스탈린주의자들은 “반제국주의”를 가장하여 독점 부
르주아지의 이익에 봉사한다. 이 점에서 그들은 다른 제국주의
나라들의 많은 스탈린주의 당들이 견고 있는 배반 행각을 기본
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NL 사회제국주의는 맞은
편에 일본판 스탈린주의적 사회제국주의를 두고 있다. 우리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본공산당은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임을
1945년 이래 오늘까지 부정하고 있다. 일공은 미국의 지배적
인 정치·군사적 역할 때문에 일본은 제국주의 나라가 아니라
고 주장한다. 일공은 NL 사회애국주의자들이 남한에 대해 하
는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방법을 일본에 적용한다. 일공은 미
국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종속을 들어 제국주의 “모국”에 대한
지지를 변명한다. 남한의 노동자 전위는 이러한 사회배외주의
적 영향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NL 사회애국주의 타도! 노
동자계급의 국제주의적 통일 단결 만세!*

101) Program of the CPSU (Bolsheviks), March 22, 1919

남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은 동·서의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는 세계적 차원의 투쟁의 뿔 수 없는 일부이며,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국제적 투쟁의 일부다. 이 투쟁은 모든 진정한 혁명가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 남한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 통일 단결시킴으로써만 비로소 수행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RCIT가 모든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에게 *혁명적 세계당* – 전 세계적인 제국주의 타도와 억압·착취 없는 사회주의 사회 구축을 위해 일관되게 싸우는 당 – 건설 투쟁에 우리와 함께 나설 것을 요구하는 이유다. 이러한 세계당 건설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국 독점 부르주아지 또는 다른 어느 나라 독점 부르주아지에 영합하는 모든 사회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을 요구한다. 이러한 세계당은 모든 제국주의 열강 – 기존 제국주의 강대국들인 미국·EU·일본과 새로운 제국주의 강대국들 중국·러시아 모두 – 에 대항하는 투쟁에 기초한, 그리고 강대국 또는 강대국의 반동적 마름 정권에 대항하는 노동자·피억압 인민의 모든 해방투쟁을 지지하는 강령을 필요로 한다.¹⁰²⁾

102) 여기서 우리는 독자들에게 RCIT의 핵심 강령 문서들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The Revolutionary Communist Manifesto” (2012) 및 “Manifesto for Revolutionary Liberation” (2016). 두 문서 모두 온라인에서 읽을 수 있고, 또는 우리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rcit-manifesto/> and <https://www.thecommunists.net/rcit-program-2016/>.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강령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rcit-manifesto-2016-korean/>]

* * *

보론 : 역사적 유추 - 1891년과 1914년 독일에서 맑스주의적 전술

교훈적인 역사적 유추로 이 문서를 끝맺겠다. 우리는 한국의 많은 진지한 진보 활동가들이 한국의 피억압 민족으로서의 긴 역사 - 먼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그 다음엔 미 제국주의에 의해 억압당한 - 를 염두하여 '자'국 국가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정하길 꺼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한 세기 전에 독일의 맑스주의자들이 직면했던 도전 과제들을 상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19세기의 후반부에 맑스와 엥겔스는 몇몇 가능한 또는 실제 일어난 전쟁에서 독일 편을 드는 것에 찬성하는 주장을 폈다. 심지어 1891년 시점까지도 엥겔스는 러시아와 프랑스의 있을 수 있는 침공에 대하여 독일을 방어할 것을 요구

했다.¹⁰³⁾ 후에 이 진술들은 악용되는데, 1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 사회민주당의 수정주의 다수파가 자신들의 배반적인 사회애국주의 · 사회평화주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1890년대 초부터의 엥겔스의 진술들은 맑스주의자들 사이에 일부 혼동을 야기했다. 그러나 레닌과 볼셰비키는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엥겔스 인용은 조금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세계대전 중 볼셰비키의 핵심 저작인 <<사회주의와 전쟁>>에서 레닌과 지노비에프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러시아의 사회배외주의자들(플레하노프를 필두로 한)은 1870년 전쟁 당시 마르크스의 진술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사회배외주의자들(렌쉬와 다비트 및 그 일파들 같은)은 러시아와 프랑스에 대항하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조국을 방위하는 것이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임무가 될 것이라는 엥겔스의 1891년 진술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인용은 부르주아지와 기회주의자들을 위해 마르크스 · 엥겔스의 견해를 터무니없이 왜곡한 것이다.”¹⁰⁴⁾

103) 이에 대해서는 특히 엥겔스의 다음 글들을 보라. “The Foreign Policy of Russian Tsarism” (1890) 및 “Socialism in Germany” (1891). 두 글 모두 다음 책에 실려 있다. Marx-Engels Collected Works Vol. 27 pp. 11-49 및 pp.235-250.

104) V.I. Lenin and G. Zinoviev: Socialism and War, The Attitude of the R.S.D.L.P. toward the War (1915), in: LCW 21, p. 308 [〈사회주의와 전쟁〉,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43-44쪽]

이것이 왜곡인 이유는 국제정세의 성격이, 그리고 그에 따라 독일을 비롯한 그 밖의 열강들의 계급적 성격도 1891년에서 1914년 사이에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임을 레닌과 지노비에프는 설명했다. 전쟁 기간 동안 레닌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였던 지노비에프는 그의 책 <<전쟁과 사회주의의 위기>>에서 이 몇 년 동안에 역사적 시기가 바뀌었고, 따라서 혁명적 전술도 바뀌어야 했음을 이해하는 것이 맑스주의자들에게 필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1893년]에는 차리즘이 주적이었다. 당시에는 인터내셔널 전체가 ‘차리즘 반대!’ 슬로건 하에 통일될 수 있었다. 1907년, 1912년, 1914년에는 이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다... 이제 인터내셔널의 슬로건은 ‘차리즘 반대’만이 아니라, 특히 ‘제국주의 반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¹⁰⁵⁾

레닌도 이 점을 되풀이해서 강조했다. 또 한 사람의 지도적 불세비키 이네싸 아르망에게 보낸 편지에서 레닌은 “1891년의 국제정세와 1914년의 국제정세를 동일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둘을 비교하는 것조차도 비역사성의 극치입니다”라고 말했다.¹⁰⁶⁾

105) G. Zinoviev: Der Krieg und die Krise im Sozialismus, Verlag für Literatur und Kritik, Wien 1924, p. 596. [영역은 필자]

106) V.I. Lenin: Letter to Inessa Armand (19,01,1917), in: LCW 35, p. 274

기본적으로, 많은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 이십여 년의 기간 사이에 정세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을 이해하길 거부했다. 자국이 1891년에는 제국주의가 아니었지만, 1907년과 1914년에는 그러한 제국주의 열강이 된 것이다. 따라서 1890년대 초에는 자국을 방어하는 것이 정당했지만, 20세기 초에는 더 이상 같은 정세가 아니었다. 실제로 1891년에는 혁명적이었던 것이 1907년과 1914년에는 반혁명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남한의 혁명가들도 비슷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20세기 동안에는 혁명가들이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그들의 모국을 방어하는 것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의무적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방어는 남한 독점 부르주아지와 그들의 제국주의 국가를 지지하는 것과 같아진다. 달리 말하면, 1990년에는 아직 정당했던 것이 2010년에는 반혁명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레닌은 1917년에 맑스주의자들은 “늙은 정식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진술은 오늘 더 유효타당하다!

발행일 : 2020년 9월 7일

발행인 : 노동자혁명당(준)

“현 남한이 미국의 ‘신식민지’라는 주장은 오늘날 남한 독점자본이 대대적으로 남한군 백성민지 인민들을 초과착취하고 있고, 이 거대한 초과이윤의 일부를 국내에서 백고물로 돌려 한중의 특권적 소수 노동자들을 계급협조주의로 유도하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분할지배를 획책하고 있는 추악한 현실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다. 노동운동 다수파는 이러한 ‘신식민지’ 이데올로기를 엄폐물 삼아 자신들의 계급협조주의와 사회애국주의를 정당화하고 남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노동 담당 부관으로 뽐내었다.”

“그러나 노동운동 조파는 현재 계급협조주의 다수파가 노동자 대중을 적으로 하여 윤개인 자본가정부와 전략적 동맹을 맺고 있다는 사실, 그로 인해 노동자계급이 정치 독립성을 잃고 부르주아지에게 종속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남한 제국주의 특권 부르주아지가 소수의 특권적 상층 노동자를 계급협조주의로 유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대중에 대항하는 전략적 동맹을 만들어내는 데에 제국주의 초과이윤의 일부를 할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조파는 남한 제국주의의 이러한 경제적 사실과 그에 따른 계급 세력관계의 변화를 인정할 기무한다. 그리하여 노동운동에서 한 귀퉁이를 차지하는 것에, ‘안면 결핵살이’로 남아 있는 것에 만족해하며,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이 계급협조 기회주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개량주의 노동운동으로 머무르게 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노동운동은 어떻게 개량주의 세력에게 장악되었나? 계급협조주의 세력이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 거둔 추악한 승리와 한국 자본주의의 '국격 상승' 사이에는 뭔가 연관이 있는가?”

“헌 남한이 미국의 '신식민지'라는 주장은 오늘날 남한 독점자본이 대대적으로 남반구 반식민지 인민들을 초과착취하고 있고, 이 거대한 초과이윤의 일부를 국내에서 떡고물로 흘려 한중의 특권적 소수 노동자들을 계급협조주의로 유도하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분할지배를 획책하고 있는 추악한 현실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다. 노동운동 다수파는 이러한 '신식민지' 이데올로기를 엄폐물 삼아 자신들의 계급협조주의와 사회애국주의를 정당화하고 남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노동 담당 부관으로 봉사해왔다.”

“그러나 노동운동 좌파는 현재 계급협조주의 다수파가 노동자 대중을 적으로 하여 문재인 자본가정부와 전략적 동맹을 맺고 있다는 사실, 그로 인해 노동자계급이 정치적 독립성을 잃고 부르주아지에게 종속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남한 제국주의 독점 부르주아지가 소수의 특권적 상층 노동자를 계급협조주의로 유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대중에 대항하는 전략적 동맹을 만들어내는 데에 제국주의 초과이윤의 일부를 할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좌파는 남한 제국주의의 이러한 경제적 사실과 그에 따른 계급 세력관계의 변화를 인정하길 거부한다. 그리하여 노조운동에서 한 귀퉁이를 차지하는 것에, '만년 결방살이' 로 남아 있는 것에 만족하며,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이 계급협조 기회주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개량주의 노동운동으로 머무르게 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